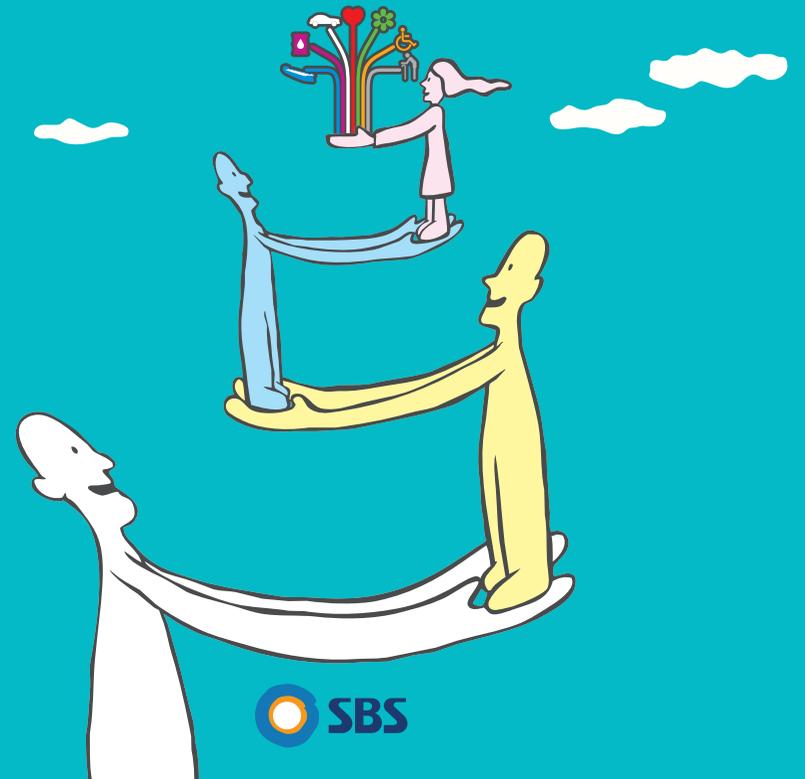


착한성장사회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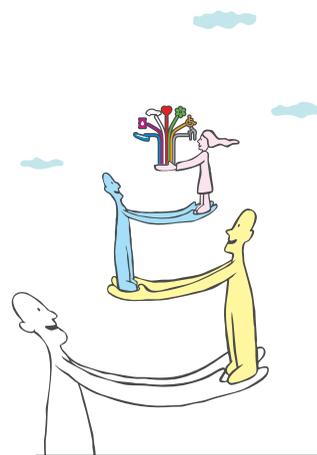


- 주최 **SBS** 공동기획 **경제·인문사회연구원** **KDI** 지식파트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미디어파트너 **SBS** **CNBC**
- 협찬 **SAMSUNG** **HYUNDAI MOTOR GROUP** **IBK기업은행** **삼성전자** **SAMSUNG** **POSCO** **한화투자증권** **PARIS BAGUETTE** **삼성생명** **SAMSUNG**
- 한화생명**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KEB 외환은행** **신한금융그룹** **KYOB0 교보생명** **LOTTE**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8시~9시30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04 개요 및 일정
- 06 개회사 <우원길 SBS 대표이사 사장>
- 08 축사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10 PRESENTATION 1.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26 PRESENTATION 2. 기로에 선 한국 <교회경 SBS 미래부 차장>
- 38 PRESENTATION 3.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①] 일자리 있는 성장 <현오석 KDI 원장>
- 48 PRESENTATION 4.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②] 고용 친화 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60 PRESENTATION 5.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③] '혁신 국가'로 가는 길 <이민화 KAIST 교수>
- 76 PRESENTATION 6. 「SBS 제언」 <신경렬 SBS 미래부장>
- 144 강평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명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일시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8시~9시30분

장소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주최 SBS

공동기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지식파트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미디어파트너 SBS, CNBC

협찬 SAMSUNG, HYUNDAI MOTOR GROUP, IBK기업은행, 삼성전자, POSCO, 한화투자증권, PARIS BAGUETTE, 삼성생명, 한화생명,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KEB, 외환은행, 신한금융그룹, KYOBO 교보생명, LOTTE

PROGRAM

시간	내용	
08:00~08:05	[개회사] 우원길 SBS사장	
08:15~08:30	PRESENTATION 1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08:30~08:40	PRESENTATION 2	기로에 선 한국 고희경 SBS 미래부 차장
08:40~08:45	PRESENTATION 3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1] 일자리 있는 성장 현오석 KDI 원장
08:45~08:55	PRESENTATION 4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2] 고용 친화 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08:55~09:10	PRESENTATION 5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3] '혁신 국가'로 가는 길 이민화 KAIST 교수
09:10~09:13	PRESENTATION 6	SBS 제언 및 대선 후보 질의 신경렬 SBS 미래부장
09:05~09:28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SBS 대표이사 사장
우원길

“제10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지혜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원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박재완, 고흥길 장관님과 여러 의원님, 기업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 영광입니다.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올해로 열번째를 맞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와 교육, 행복, 기후변화, 소통, 그리고 경쟁과 같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미래비전을 한발 앞서 제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으로 정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선진 사회로 가는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 성장에만 몰입하면서 여타분야에 누적된 부작용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양극화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실업과 영세한 자영업자, 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만들어 가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된 겁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의 위험에 빠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을 주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 후보님들과 함께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안팎의 여러 도전들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입니다.
우원길 SBS 사장님, 대선 후보님, 발표를 맡으신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요즘처럼 세계에서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뻗어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잘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악과 영화 등의 소프트파워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르는 데에는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부신 성장 이후에 도래한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저성장 시대의 진입, 고령화의 위험,
경제·사회적 격차 확대, 막대한 가계부채, 청년실업 문제와 높은 자살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복지 확대 등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단기적 응급처방으로만 대응하려 한다면
사회갈등은 물론 향후 국가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여 중국에는
경제·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회통합과 안정을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가치 규범이
정립되어 개인의 창의와 역량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착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년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분배와 성장, 고용창출과 상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정책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적 현안과 미래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생발전 종합연구’, ‘잠재성장률과 경제민주화 연구’,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변화와
대응연구’, ‘가족변화의 전망과 대응연구’ 등 각종 종합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면서도 지속가능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협동연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SBS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기획하여 마련한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1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사회발전연구소장 장덕진입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년간에걸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과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유사한 국가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사회의 질 유형을 보이는 나라들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인데, 이들이 예외없이 유로존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서있거나 다음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과 유럽 4개국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 비교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다섯 개 나라를 비교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로서 그리스와 이태리, 한국과 사뭇 다른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위기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례로서 독일,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되 경제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사례로 터키를 택하였습니다.

SBS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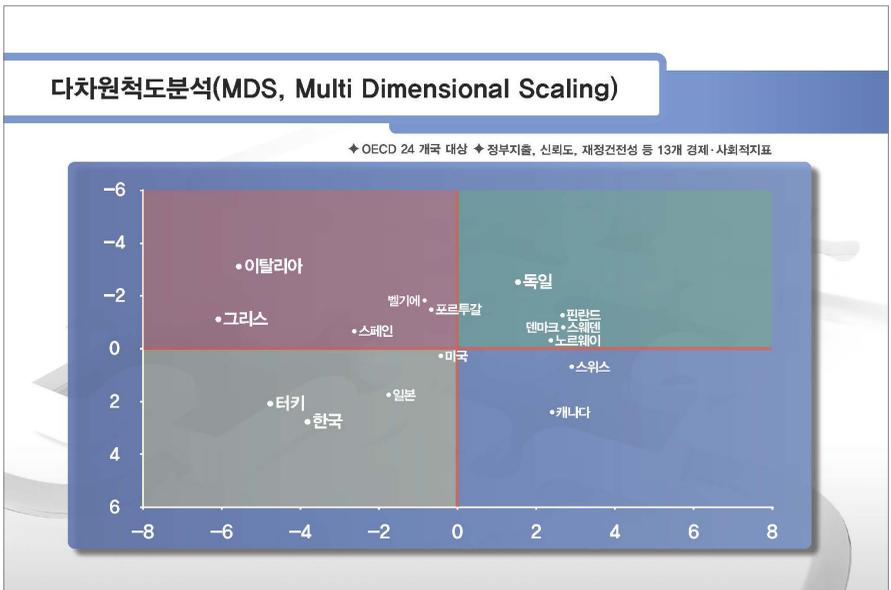
- 경제·사회지표 수집 및 분석
- 5개국 대상 동시 국민의식 조사 실시
- 현지 전문가 50 여명 심층인터뷰

연구를 위해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지난 5월 5개국에서 동시에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을 방문하여 50명의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는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

다차원척도분석(MDS, Multi Dimensional Sc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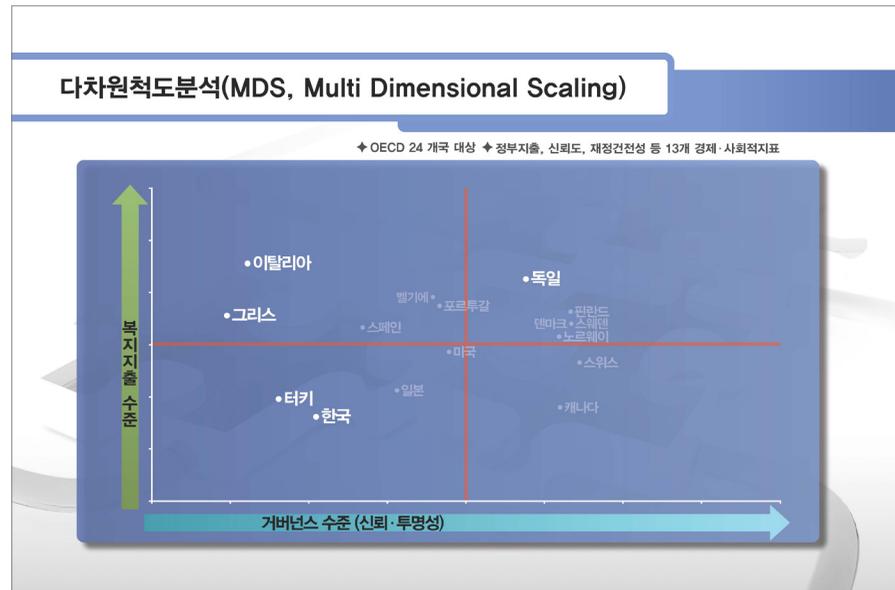


우선 MDS 분석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은 13개의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각 국가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그림을 보실 때는 일종의 국가들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3개의 지표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멀리 놓이게 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위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분석대상이 된 그리스와 이태리를 비롯하여
 현재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라고 알려진 소위 PIGS 국가들이
 모두 왼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결과는 위기를 가져오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근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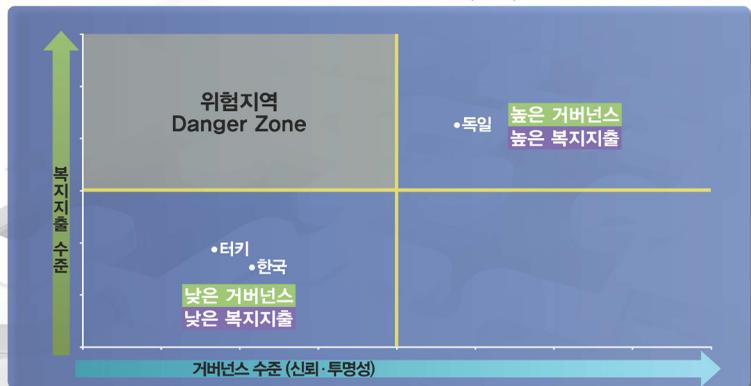
한국은 다행히도 위기지역에 속하지 않고 좌측하단에 터키와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와 무관한 또 하나의 사례인 독일은 우측상단 쪽으로
 위기지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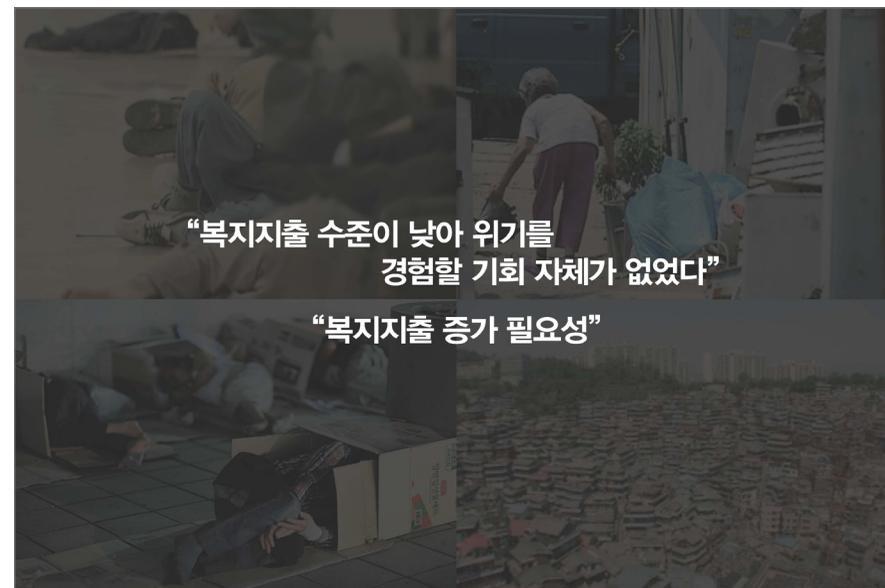
자,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13개의 지표들 중에서 세로축은 공적사회지출,
 보다 익숙한 용어로는 복지지출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가로축은 거버넌스의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과 투명성이 포함되고,
 이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입니다.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경제적 위기의 사회적 기원

◆ OECD 24 개국 대상 ◆ 정부지출, 신뢰도, 재정건전성 등 13개 경제·사회지표



결과적으로, 한국과 터키는 거버넌스의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복지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독일은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지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복지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위기를 피했다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위기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지지출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아도 그럭저럭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현재의 위치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너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어서 일정 부분 복지지출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 비교

무상보육·교육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보육 반값 등록금	취약계층 선별복지 보편복지 시스템 도입
-------------------	-------------------	--------------------------

복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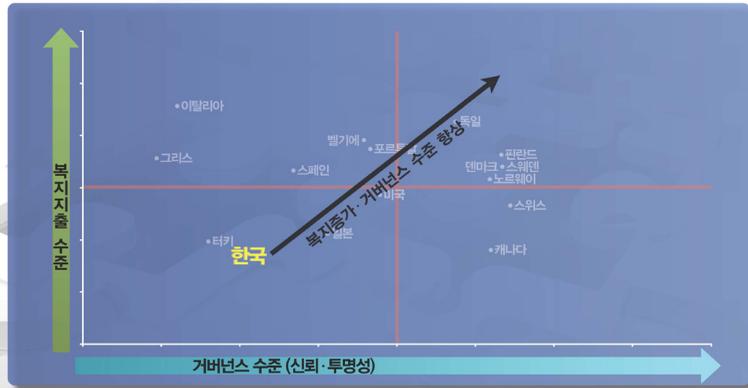
이 자리에 세 분의 대선 후보들이 와계십니다만, 복지지출의 수준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 분 모두 복지지출 증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한국은 커다란 정책적 전환기에 서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은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이동 가능 경로 1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복지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거버넌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그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기보다는 법치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주력하는 북미식 모델입니다.

한국의 이동 가능 경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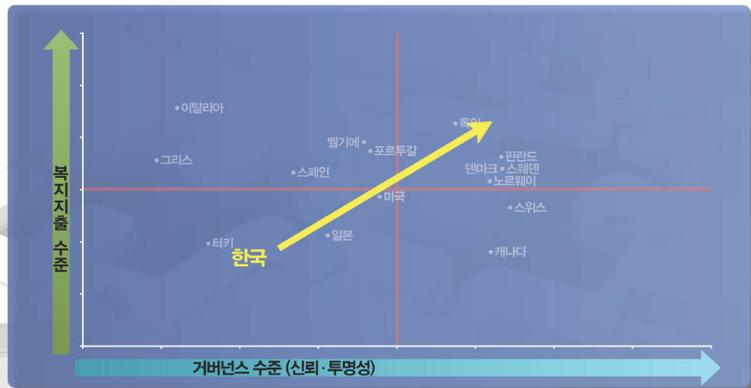
두 번째 경로는 복지지출 증가와 거버넌스 개선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그림의 이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이동 가능 경로 3



세 번째 경로는 거버넌스의 개선 없이 복지지출만 늘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경로를 따라갈 경우 곧바로 위기지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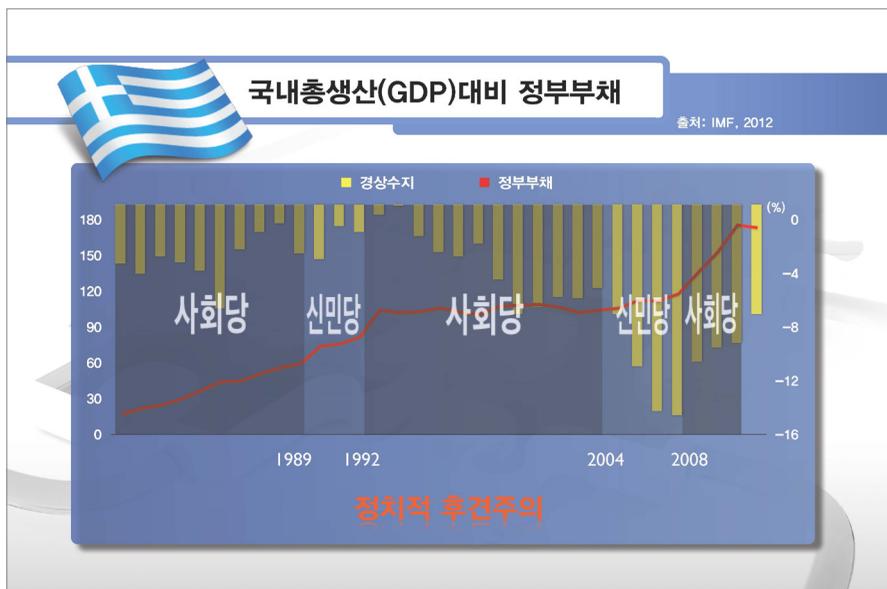
복지지출과 함께 거버넌스 수준도 높여야...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지역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즉 그림의 위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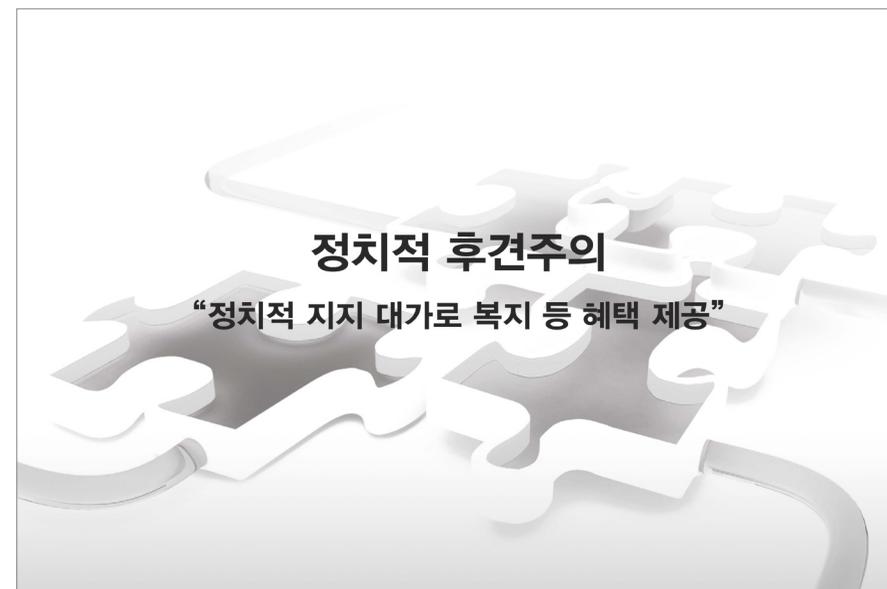


그렇다면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그리스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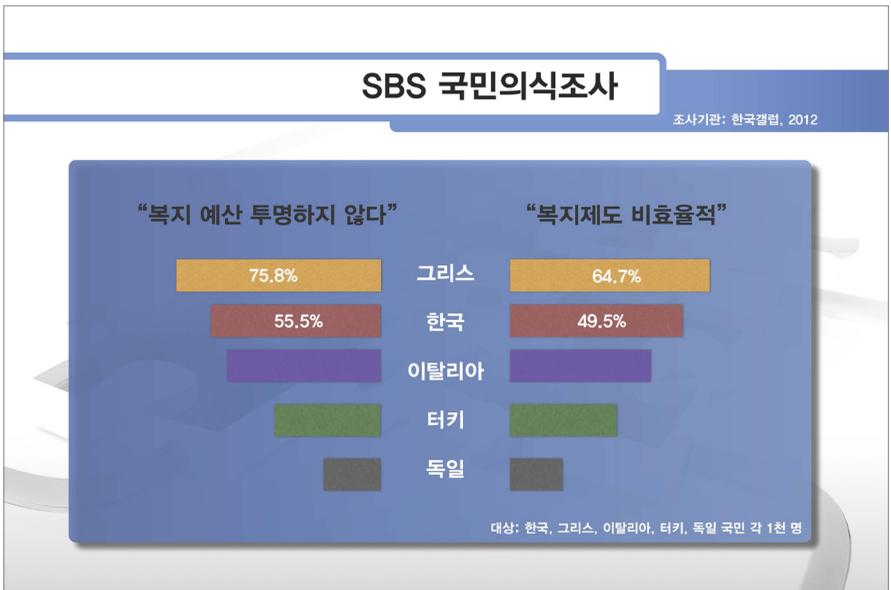


지금 보이는 것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규모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는 1980년 이후 거의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왔고, 그 결과 엄청난 정부부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정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그림 위에 각 시기별 집권당을 덧씌워 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양대 정당인 사회당과 신민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경쟁적으로 부채를 늘려놓았습니다.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부패를 눈감아주고 혜택을 제공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는 GDP 대비 많은 복지 예산을 지출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수준 낮은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서베이에서 “복지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은 그리스에서 75.8%로 가장 높았고, 현행 “복지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그리스에서 6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으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두 가지 응답에서 모두 그리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복지지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리스 Chios 섬의 시각장애인수당 부당 수령 사건입니다. 취재결과 동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지출을 많이 하고도 위기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해진 독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독일 개혁의 핵심

하르츠(Hartz) 개혁

노동시장 개혁
실업률 감축 대책

어젠다 2010

국가개혁방안
노동·실업·조세·교육 등

사회적 합의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은 지난 10여년 간 하르츠 개혁이나 어젠다 2010과 같은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의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정리해고

유연안정화

구조조정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인 노동시장 개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통합의 틀이 없다면 한 한국에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만을 의미하고,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타협안이 됩니다. 반면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유연안정화'라고 불립니다. 독일의 대표적 노동시장 전문가인 귄터 슈미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터 슈미트 베를린사회연구소장

독일에서는 해고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해고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용된다.
이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적다.
예컨데,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이보다 크게 적은 10~15% 수준이다.



사회통합의 제도적 기반 I

사회적 시장경제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경제운용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보수정당 기민당의 싱크탱크인 아데나워 재단의 마티아스 쉐퍼 박사의 설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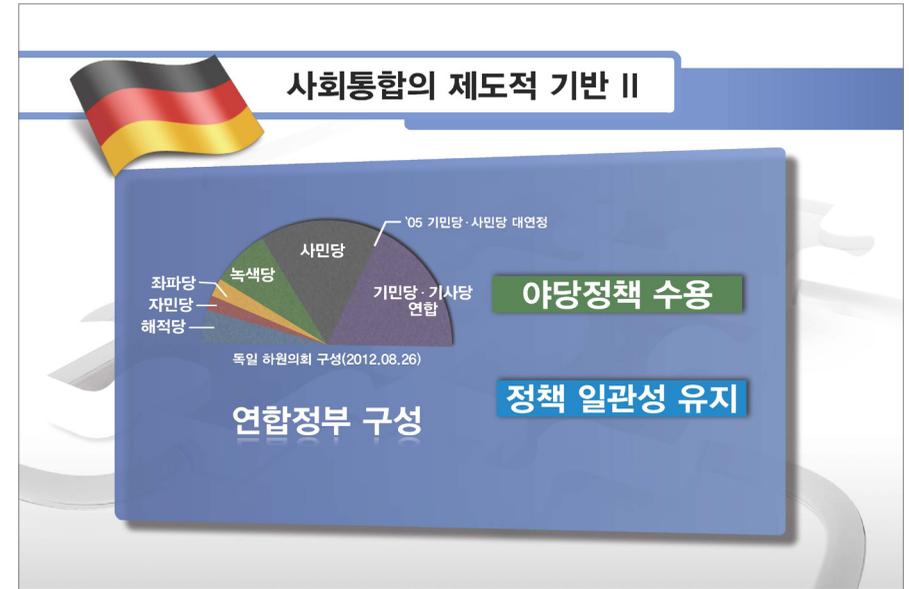
시장경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보완해 만든 개념이 사회적 시장경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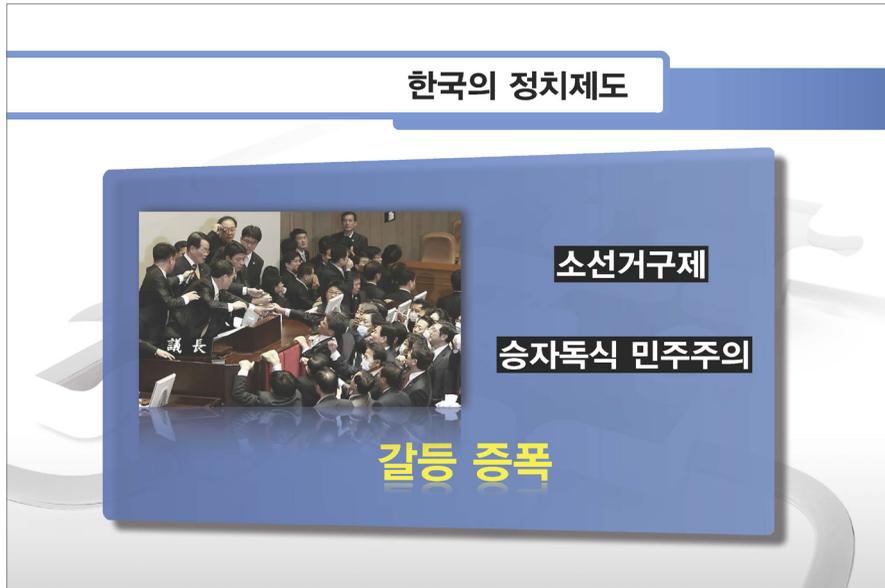
실제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높은 편이고, 특히 경제적 상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약자들 자신보다도 기득권 층이 더 적극적인 셈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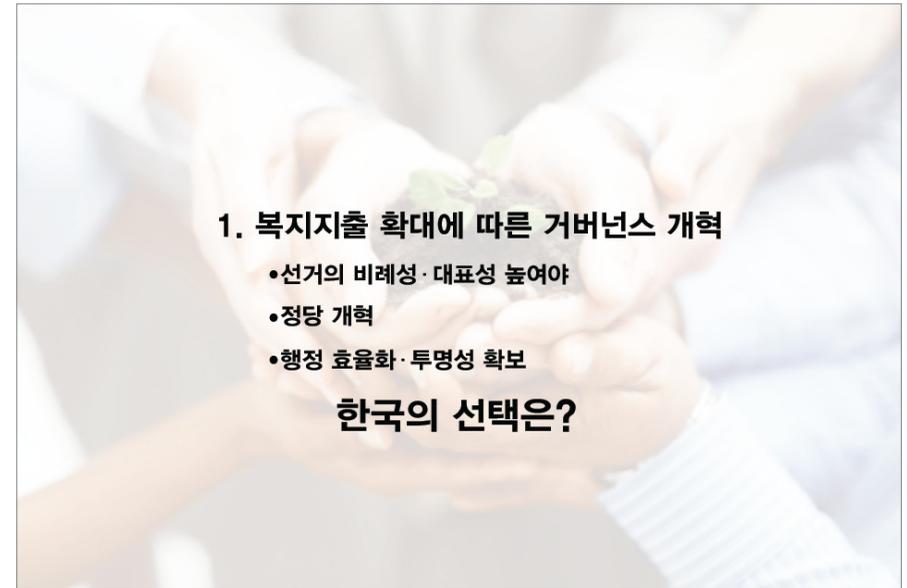
두 번째 비결은 정치 영역에 있습니다. 정당명부식 선거제도와 연방제는 지역간 그리고 사회세력간 대립을 완화하고 갈등을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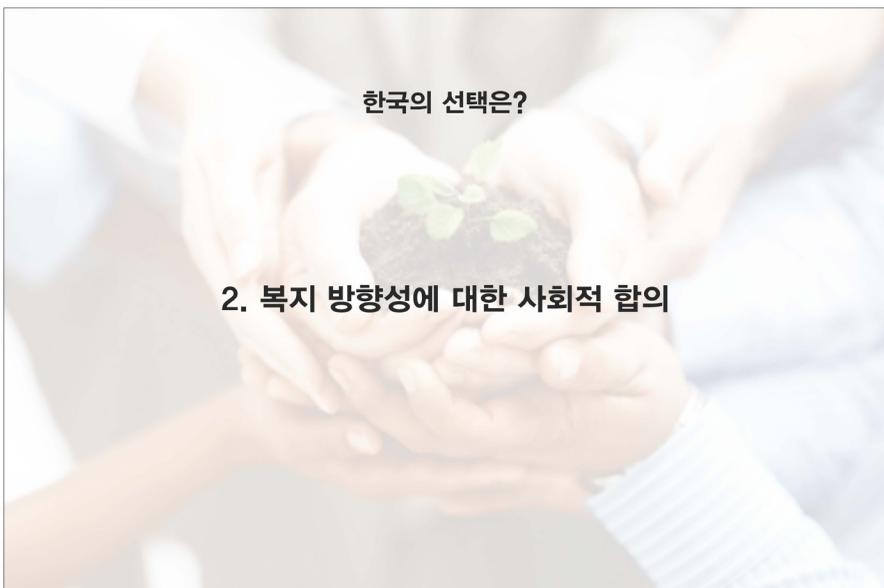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현실 정치에서 항상적으로 연합정부 구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에 비해 때로는 특정 지역에서 과반 이하의 득표를 하더라도 의석을 100%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제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개혁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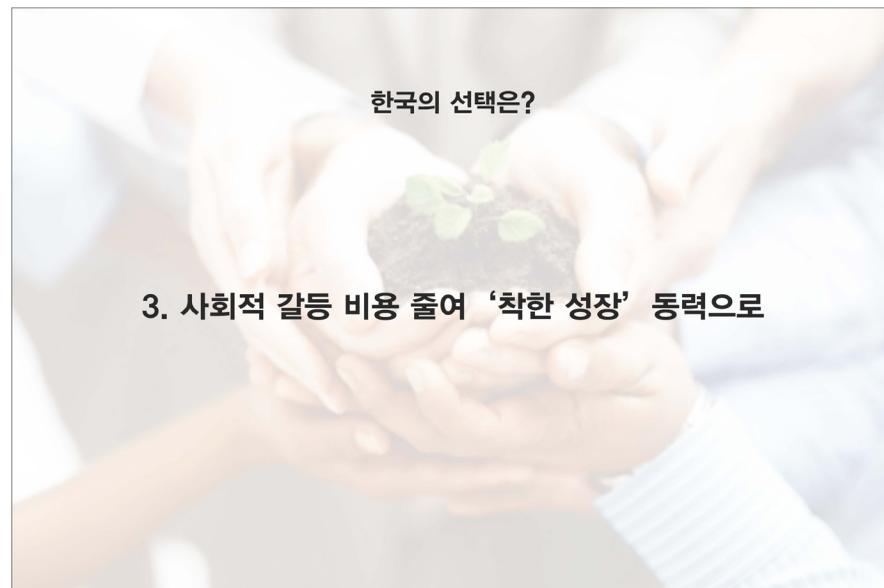
끝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틀에서 볼 때 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거버넌스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정당조직의 개혁,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혁을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2. 복지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에 비해 때로는 특정 지역에서 과반 이하의 득표를 하더라도 의석을 100%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제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개혁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3. 사회적 갈등 비용 줄여 '착한 성장' 동력으로

끝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틀에서 볼 때 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거버넌스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정당조직의 개혁,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혁을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PRESENTATION 2
기로에 선 한국

고희경 SBS 미래부 차장



기로에 선 한국

고희경
SBS 미래부 기자

안녕하세요? SBS 미래부의 고희경기자입니다.
방금 전 영상으로 보셨듯이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참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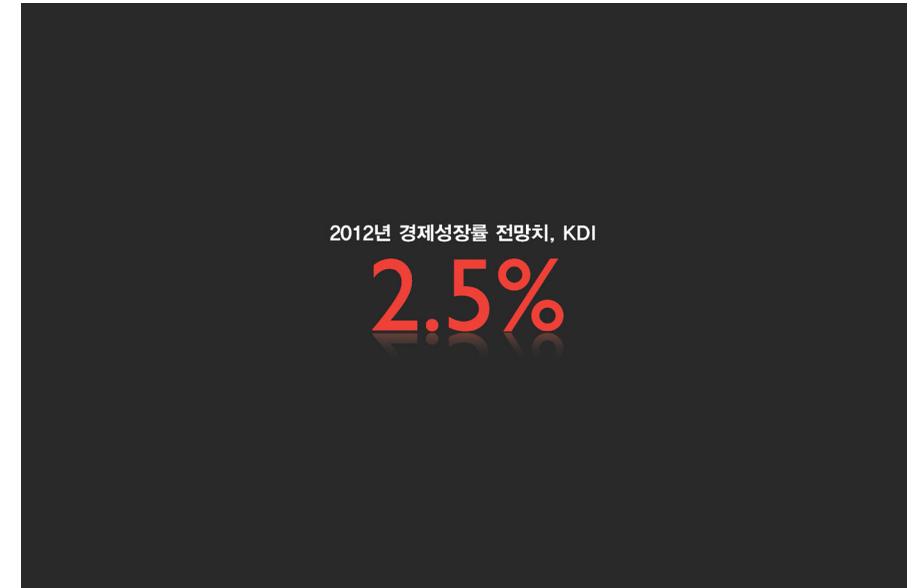
그래도 한국은/그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회복력을 보여 왔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까지 추락했다가 사상최고등급으로 올라섰고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 -5.7%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바로 이듬해 10.7%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이런 용수철 같은 회복탄력성 뒤에는 강한 제조업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저성장'이라는 혹독한 시련기에 접어든 지금..
 이런 제조업 경쟁력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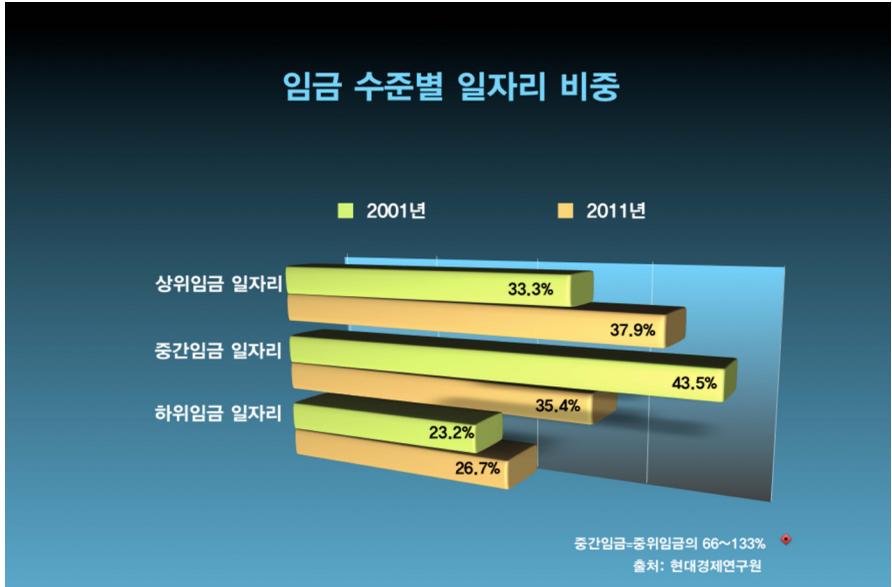
오늘 저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다섯 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2.5%. KDI가 전망한 올 경제성장률입니다.
갈수록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과 내수 양쪽 모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전망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소득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임금 수준별로 일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난 2001년엔 전체 일자리 중 중간임금 일자리가 43.5%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엔 이 비중이 35.4%로 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대신 상위와 하위임금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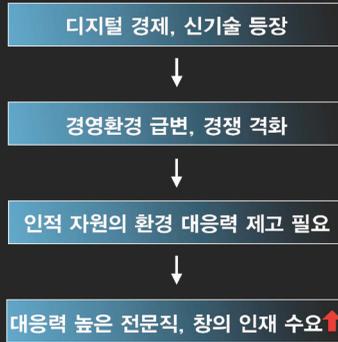


중간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기술진보와 세계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했을 일을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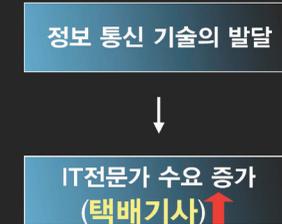
또, 생산기지는 중간재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해외로 옮겨지고
인력도 모두 현지 채용됩니다.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특히 기술의 진보는 기존의 중간임금 일자리를 양극단,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로 나눠놓았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되고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환경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또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영원한 1등..불가능하죠. 결국, 기업의 인력 수요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 전문직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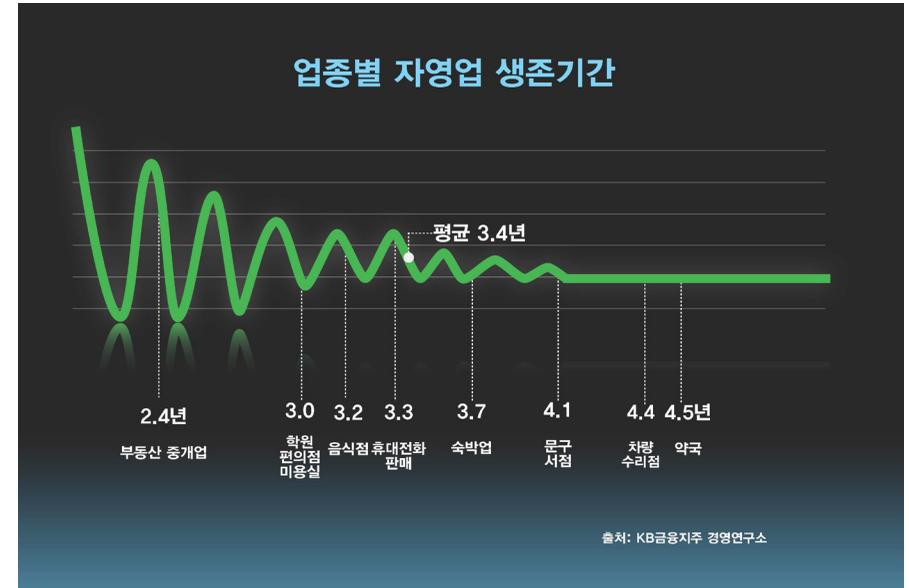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그렇다고 고임금 일자리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IT전문가들의 일자리도 많아졌습니만,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늘어난 일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택배기사입니다. 온라인쇼핑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자리의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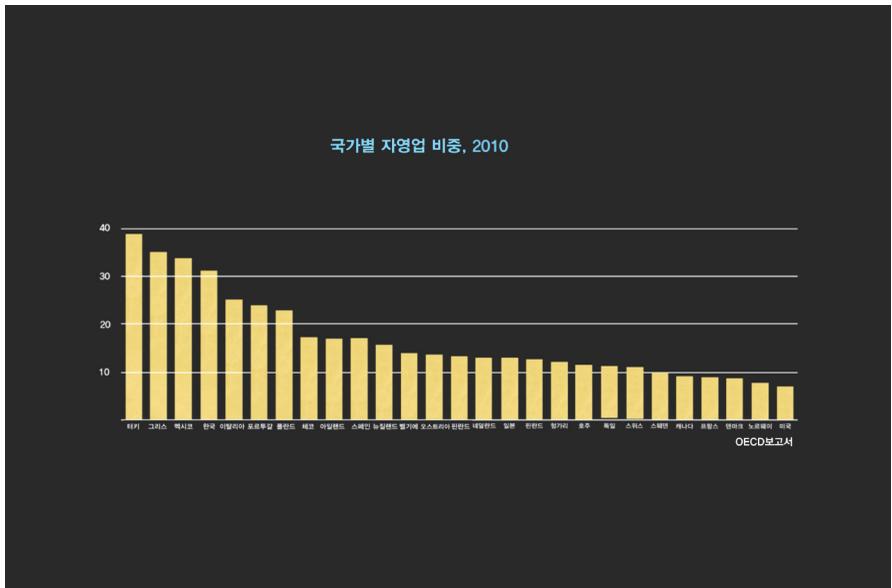
세 번째 위기는 자영업입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이 자영업 푸어입니다.
 사회보험 같은 공공복지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은
 자칫하면 신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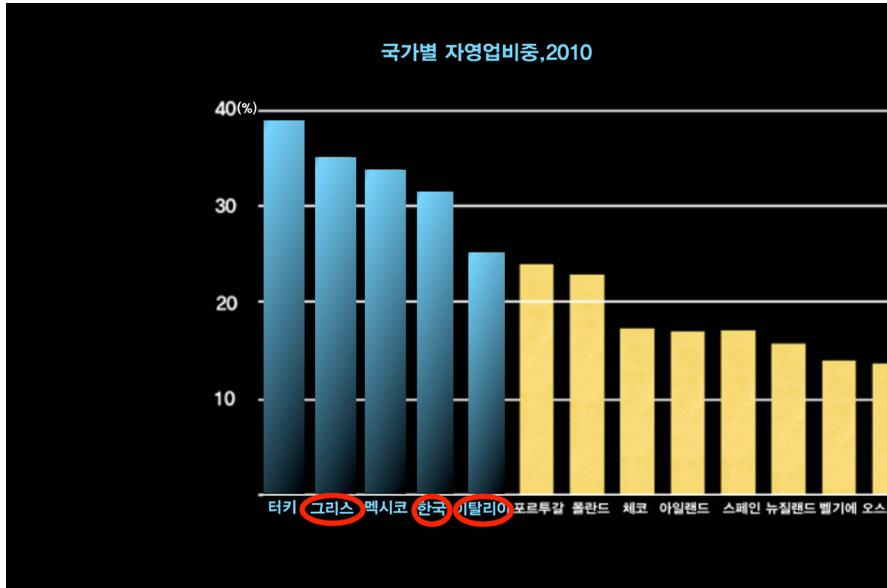
이게 뭡가요?
 병원에서 보는 심장 모니터같죠.
 자영업자의 숨이 끊기는, 망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존기간이 3.4년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2.4년, 음식점은 3.2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실제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서울 양천구 목동 SBS본사 앞에 있는 지하상가입니다.
 이곳은 목동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황금상권'입니다.
 음식점만 무려 37개입니다. 그만큼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죠.
 본격적으로 상가영업이 시작된 게 지난 2005년부터인데요,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음식점은 몇 군데나 될까요?
 조사 결과 단 세군데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두 군데는 상가 소유주가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임대로 살아가는 가게는 단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경쟁이)치열하죠. (다른)음식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에 맞춰야 해요.
 잘 나가는 집도 몇년 지나면 주춤하게 되요. 그러면 또 다른 집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1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예요"
 자영업으로 성공하기..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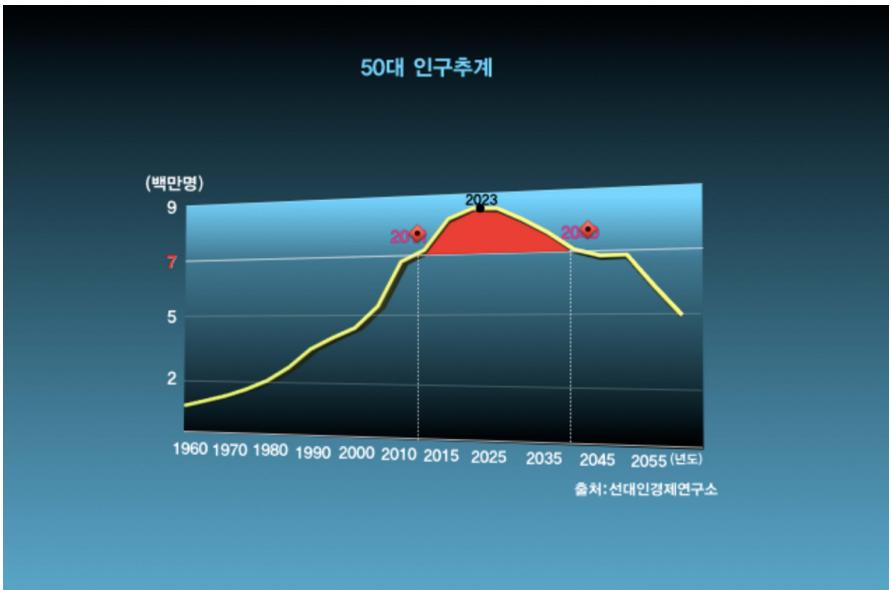
한국과 남유럽 위기국가들의 공통점이 많은데요,
 정치불신이 높고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또 하나, 자영업이 많습니다.



OECD국가 중 자영업비중이 높은 나라 TOP5안에 그리스, 한국, 이탈리아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수는 58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선두그룹이 50대 초반에 이르면서 자영업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인구 추정치를 한번 보시죠.
 50대 인구는 작년으로 7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계속 늘어나 2023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40년이 되어서야
 다시 7백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영업시장의 '베이비부머쇼크'가 앞으로 30년은 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그야말로 한국경제의 숨겨진 폭탄입니다.



네 번째, 사회갈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1987년 민주화시위 당시 때보다도 골이 깊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은 심해졌는데 '갈등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통조차 안 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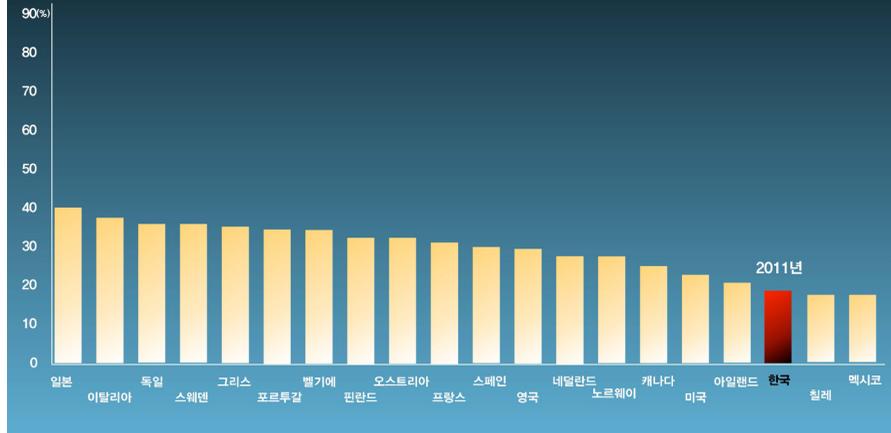
葛藤

취갈 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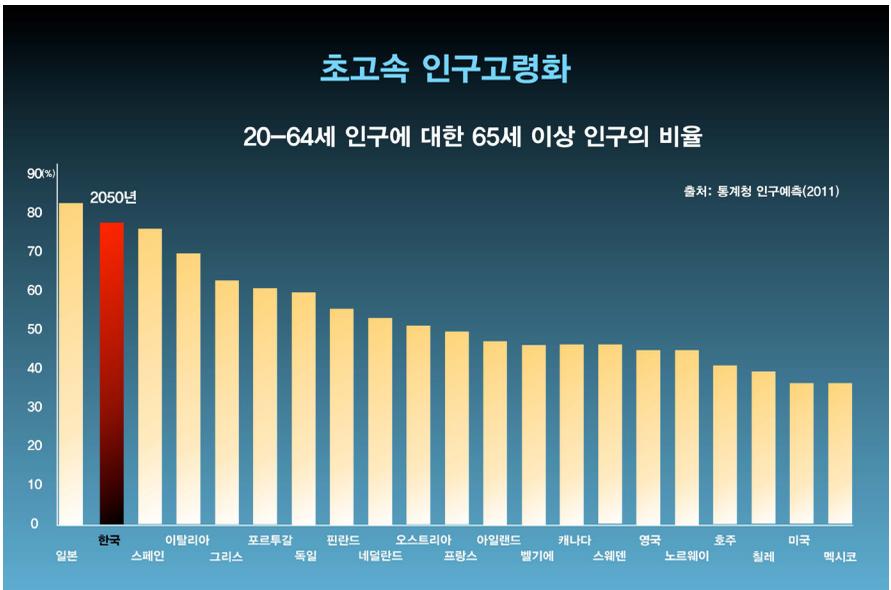
갈등(葛藤)은 한자로 취과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취과 등나무는 모두 감이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따라서 두 넝쿨이 한 곳을 동시에 감고 올라가면 단단히 엮여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사회는 이 나무처럼, 풀지 못한 갈등에 칭칭 감겨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구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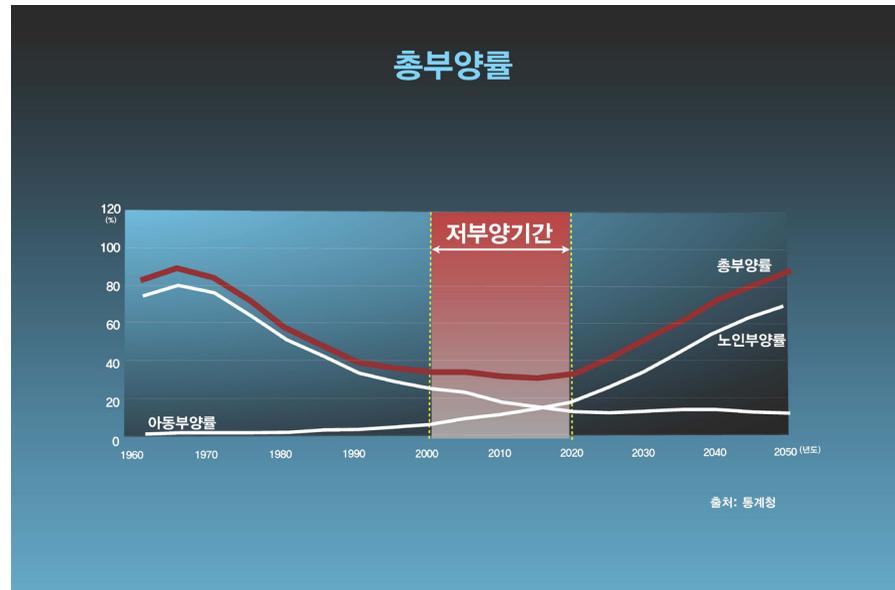
20-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다섯 번째, 우리를 기다리는 큰 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입니다.
 그것도 진행속도에 있어서 세계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고령화'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젊은 나라지만



2050년이 되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늙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인구구조상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기 전으로, 이른바 '저부양기간'입니다.
 미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령화 충격에 대비할 최적의 기회인 셈입니다.
 2020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미래한국리포트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PRESENTATION 3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1

일자리 있는 성장 현오석 KDI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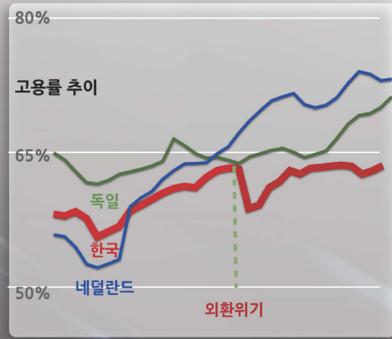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1. 일자리 있는 성장

현오석
KDI 원장

고용없는 성장

출처: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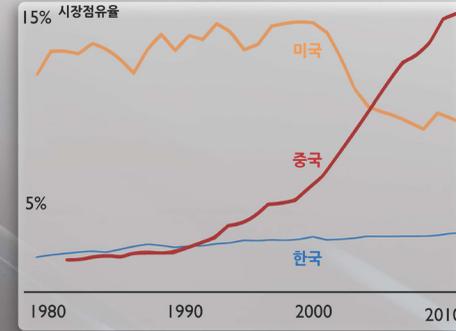
분배악화
빈곤확대

고용친화적 성장
성장촉진형 노동시장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했지만 2000년대 들어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빈곤확대와 분배악화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고용친화적 경제성장'과 '성장촉진형 노동시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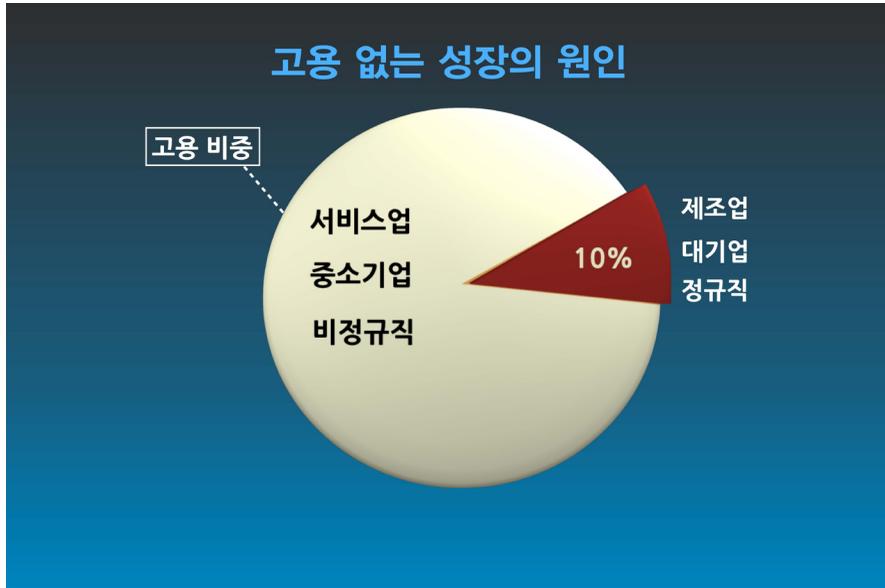
치열해진 시장경쟁

출처: World Bank



기술·자본 ↑
노동수요 ↓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가 국제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보다 수출시장 점유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은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집약도와 자본집약도를 높여 왔고,
그 결과 노동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10%의 핵심부와 90%의 주변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핵심부는 경직성이 매우 높아 주변부로 외연을 확대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고용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현재 80%에 달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미 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비중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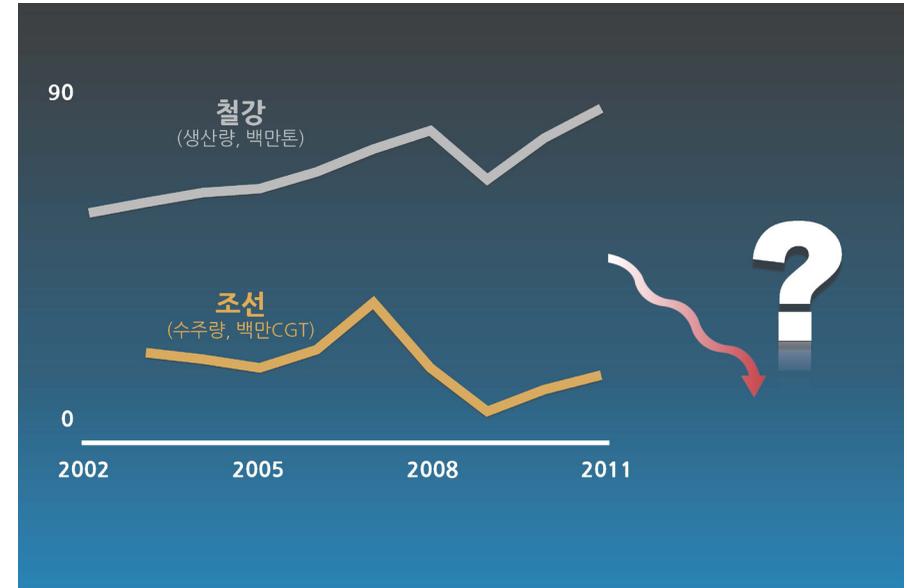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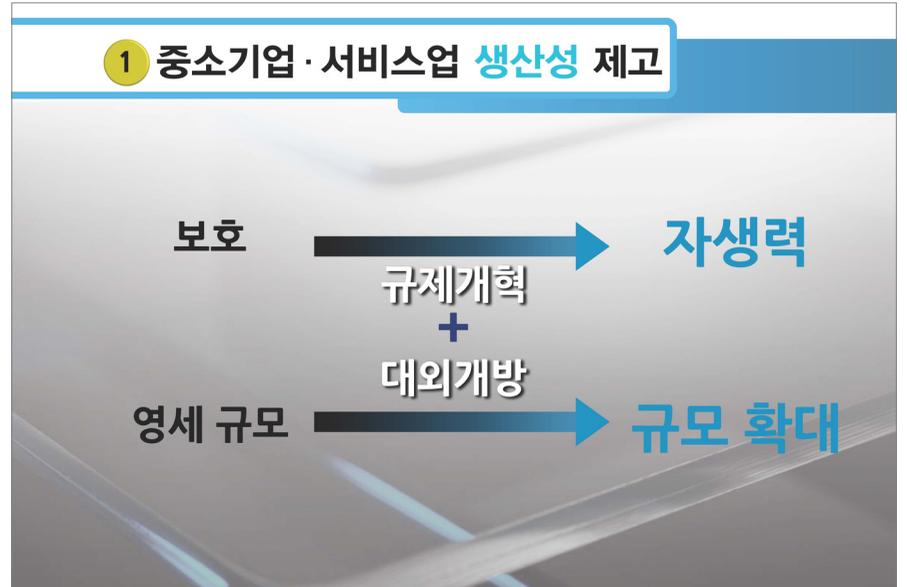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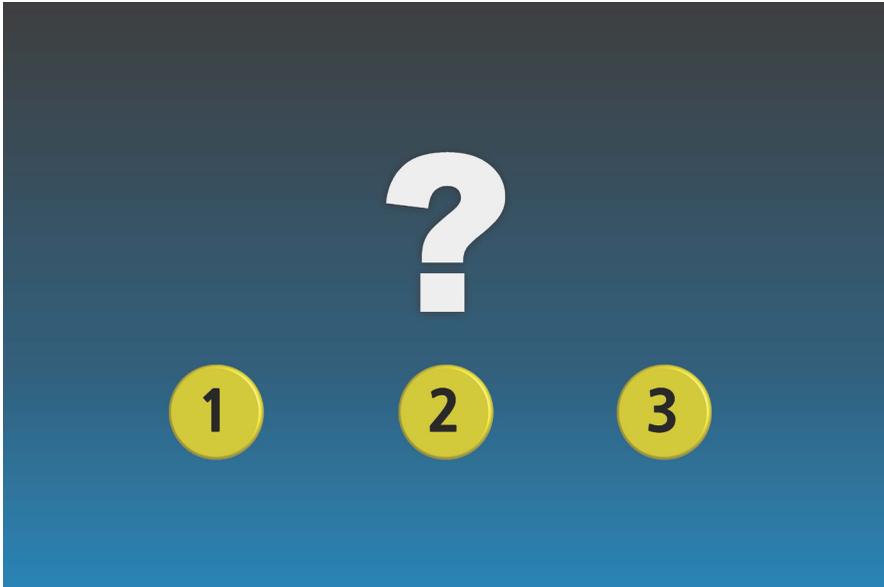
2012



50%



앞으로 철강·조선 등의 산업이 사양산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70-80년대에 선진국으로부터 이들 산업의 일자리를 뺏어왔지만,
앞으로는 후발개도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기조를 보호 위주에서 자생력 확대 위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능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대외개방 확대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인력매칭 등의 분야에서 기업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눈먼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육 및 훈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쓸모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 빠르게 바뀌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일입니다.

2 기업·근로자·정부, 일자리 협력



기업
 “국내 고용 우선”

둘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양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해외진출보다 국내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철수하여 국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보다 중장기적인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근로자·정부, 일자리 협력



노조

“무리한 요구 **자제**”

노조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고용보호 요구, 그리고 경영간섭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이 어려워질수록 고용은 줄어들고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노조가 이미 80년대부터 국가경제 전체의 고용창출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 왔습니다.

2 기업·근로자·정부, 일자리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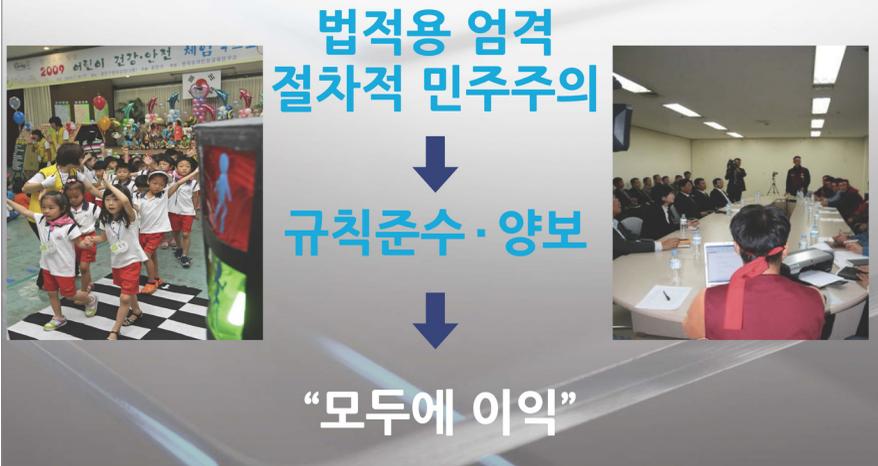


정부

“고용서비스
생애근로 연장 **지원**”

한편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근로 연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주된 일자리 근무가 10년 이상 짧은데, 기업들이 생산성 중심의 임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뢰·배려·보완의 거버넌스



마지막 과제는 선진형 국가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각종 법/제도/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진형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룰(rule)’이 지켜지는 사회, 서로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한편,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확산해야 합니다.

신뢰·배려·보완의 거버넌스



‘부(wealth)’를 개인의 우월성과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천민 자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신뢰·배려·보완의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로 보완

제3섹터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착한성장사회 메카니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성향상

고용친화
성장

+

성장촉진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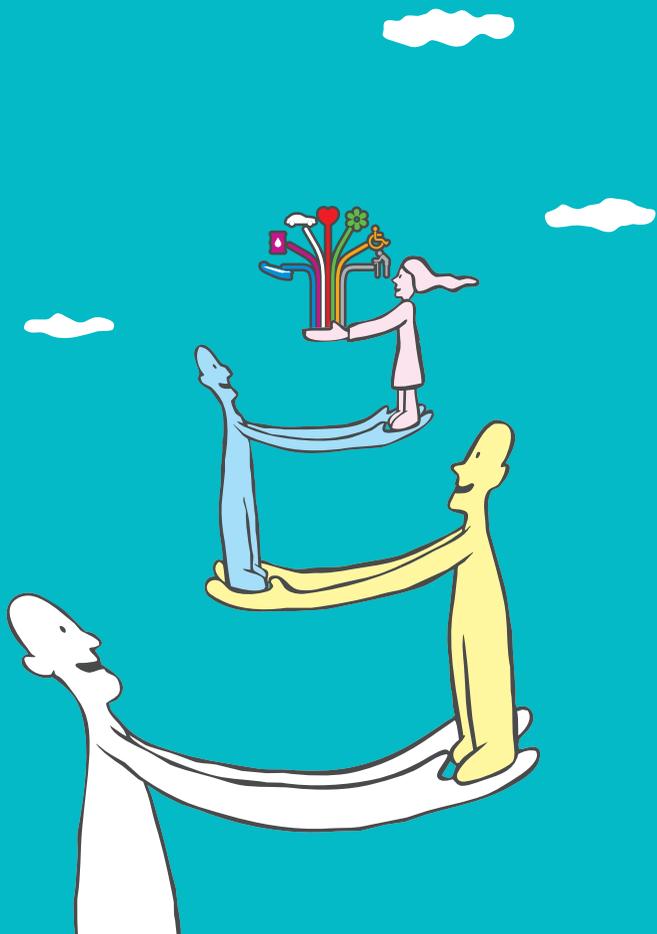
노사양보
정부지원

선진형 국가 거버넌스 확립

지금까지 제언드린 세가지 과제가 잘 마무리되어야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착한성장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PRESENTATION 4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2

고용 친화 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2. 고용친화 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좌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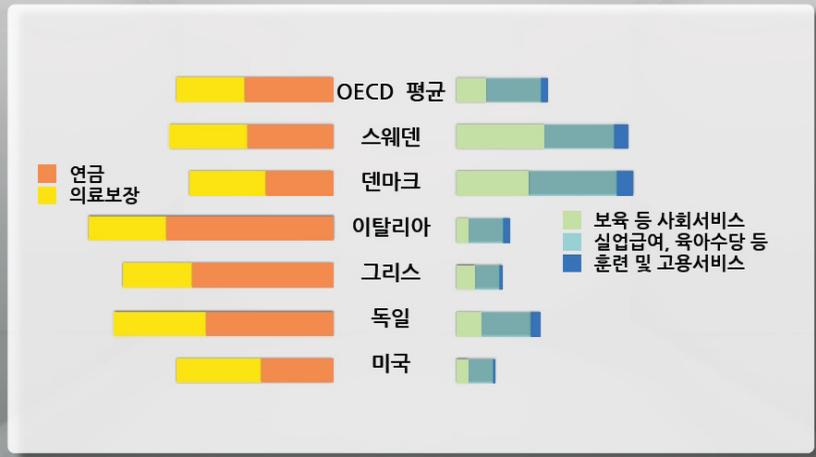


세로축은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복지지출이 많은 이태리, 독일, 스웨덴 등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이들 OECD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데, 복지수준이 매우 낮다 보니 이제 “복지 좀 하자” 하는 바람이 부는 거 같습니다. 이 복지바람을 타고 한국복지국가는 성장기에 접어 들어섰습니다. 이 성장기에 올바르게 잘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좌측 상단에 자리잡고 있는 이태리 그리스 등은 잘못 성장한 복지국가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복지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국가부채에 허덕이고 경제위기에 휘청이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측 상단에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위기의 무풍지대입니다. 이태리 보다 더 많은 돈을 복지에 쓰면서도 경제와 재정 모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유는 복지총량이 아닌 복지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습니다. 가로축을 보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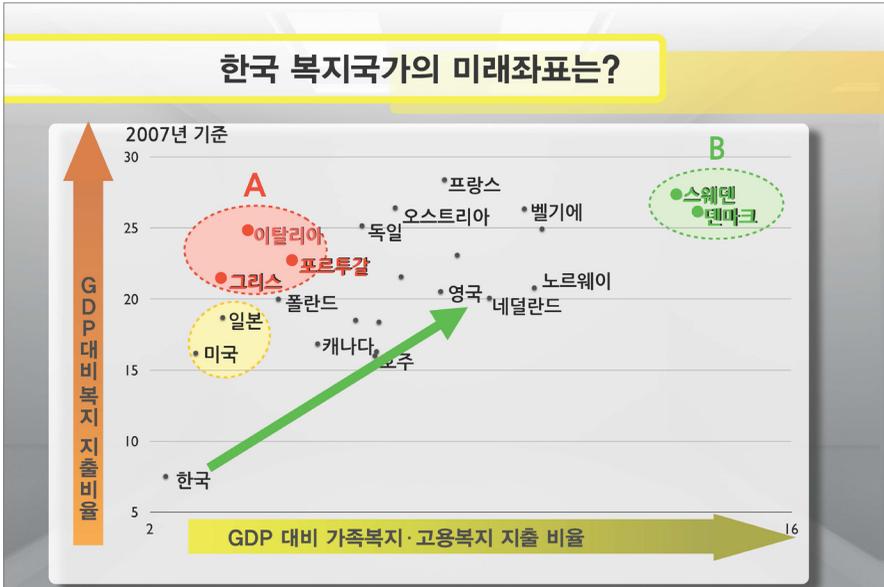
국가별 복지프로그램 구성



스웨덴과 덴마크는 가족복지와 고용복지 지출이 많아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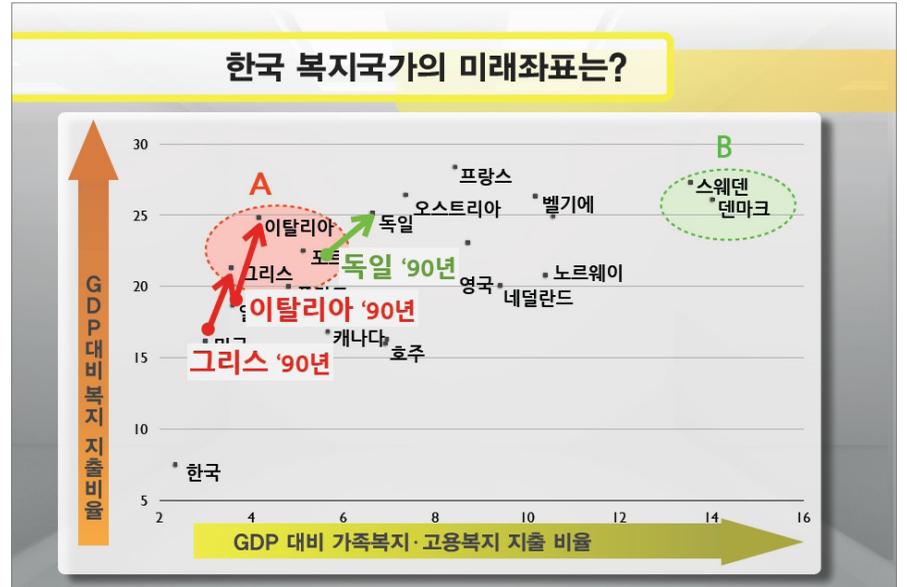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보육 같은 사회서비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같은 재취업 지원에 많은 돈을 씁니다. 사회투자형 혹은 고용친화형 복지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 이태리와 그리스는 연금과 의료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만 과대성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은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태리아/그리스는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매우 약합니다.



고복지지출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 국가부채와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그리스 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복지바람을 탄 대한민국호가 가야할 곳은 A가 아닌 B입니다. 스웨덴까지는 못 가더라도 방향은 B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빨간 화살표에서 확인되듯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난 17년간 복지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유럽의 강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그냥 수직상승한 것에 반해, 독일은 고용친화형 복지의 비중을 늘려, 어렵게나마 B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슈뢰더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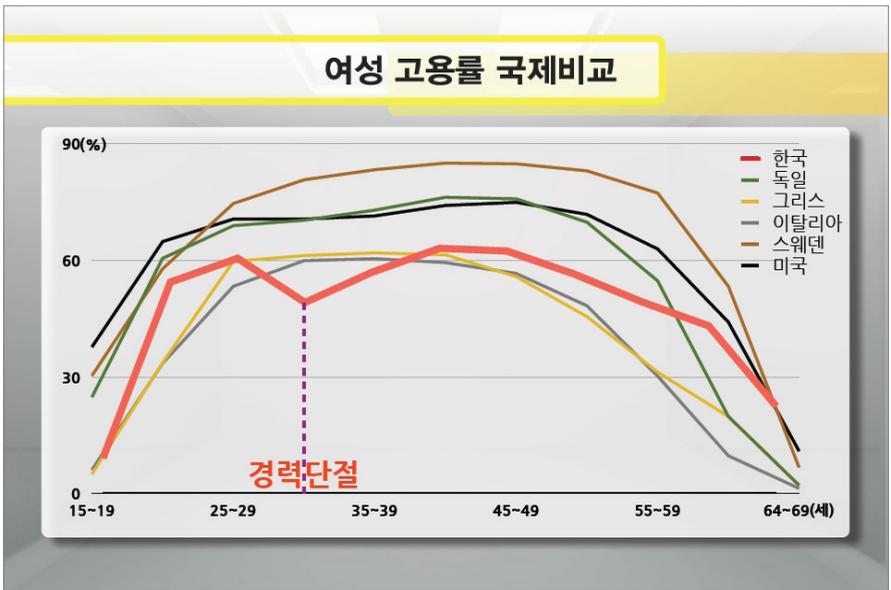
Neue Mitte (新중도) 주창

스웨덴형 고용친화 복지로 전환 추구

1998년 집권한 슈뢰더의 독일 시민당정부는 Neue Mitte라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대대적인 복지개혁에 나섰습니다. 스웨덴처럼 고용친화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우리도 고용친화형 복지로 가야합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급격한 노동력 감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먼저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육아기에서는 일을 포기하기에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M커브 현상, 즉 경력단절이 발생합니다.

고용친화 복지의 길은?

맞벌이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
조세기반 확대**

**가구당 소득 증대
중산층 진입 수월**

**배우자 실직 시
가정내 소득 안전망**

사랑스런 아이 둘은 낳아 키울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여성들이 맘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둘이 벌면 중산층 진입도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배우자 실직 시, 가장 확실한 가정 내 사회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고용친화 복지의 길은?

육아복지



다행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공보육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0~2세 보육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아기에게도 부모에게도 할 짓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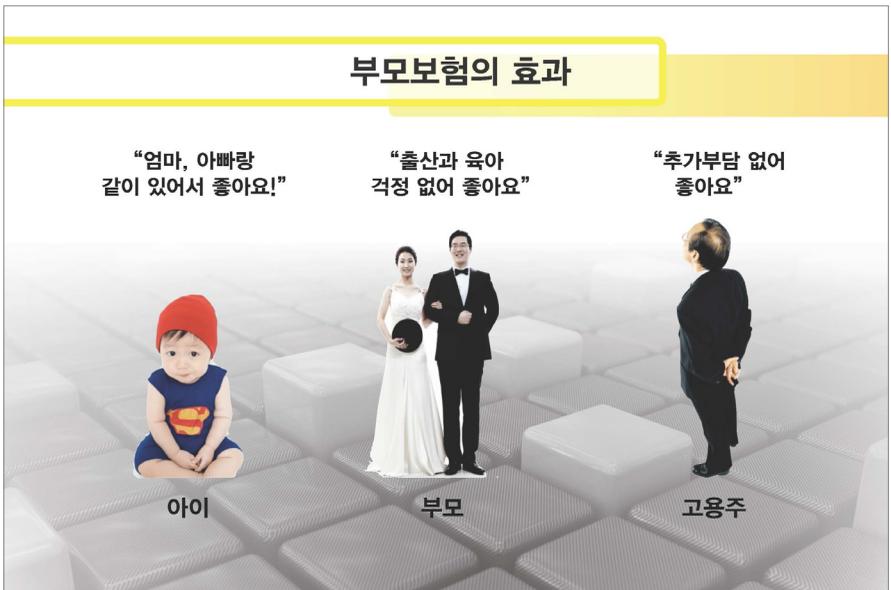
적어도 출산 후 1년 동안은, 부모가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유급휴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육으로 커버하구요.

스웨덴의 부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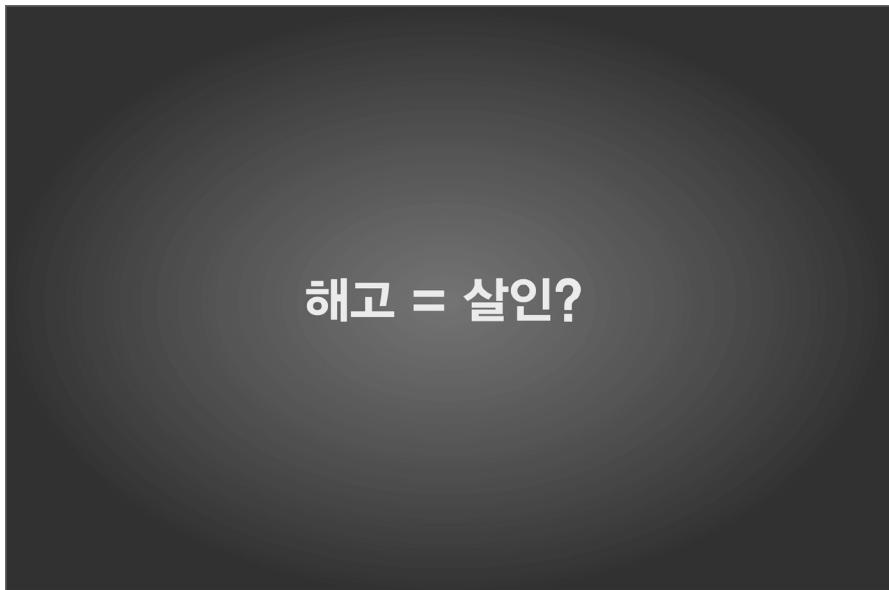
종류 육아휴직 수당, 자녀간호수당, 아빠수당, 임신 수당

육아휴직 수당	13개월 동안 종전 급여의 최대 77.6% 추가 3개월은 하루 180 SEK씩 (약 3만원) <u>부모보험기금에서 지출</u>
자녀간호 수당	12세 자녀 1인당 최대 120일
아빠 수당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10일간 유급 휴가

스웨덴의 해법이 참고할 만한데...스웨덴에는 부모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는 집에서 키우라고 소득비례형 육아휴직수당을 줍니다. 기존 월급의 80%가까이 받을 수 있기에,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또 육아휴직수당이 해당 고용주 호주머니가 아닌, 부모보험기금에서 나오기에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지도 않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간호수당 등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 부모 그리고 고용주도 함께 Win Win하는 행복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0-2세 보육을 밀어붙이기 보다, 그 돈으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수당을 소득비례형으로 개편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의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소 과장되긴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다면, 쌍용차 사태처럼 저렇게 격렬하게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친화 복지의 길은?

고용보험 확대-내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미납 사업자 처벌 강화
노동조합의 고용보험 가입 운동

실업급여 인상

중산층 근로자 실업 불안 해소

급여 조건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

먼저 1,4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제 세금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매칭 지원을 하는 만큼, 미납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노총과 한노총이 고용보험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 근로자도 실직의 공포를 덜게 실업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대신 직업훈련과 구직을 조건으로 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고용서비스를 결부시켜 다시 재취업시키도록 해야합니다.

고용친화적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일자리, 직업교육,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동맹’



독일, 1998년 12월 노사정 합의

독일은 일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은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누구나 일할 수 있게 강도 높은 복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직업교육,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동맹’이라는 사회적 타협을 맺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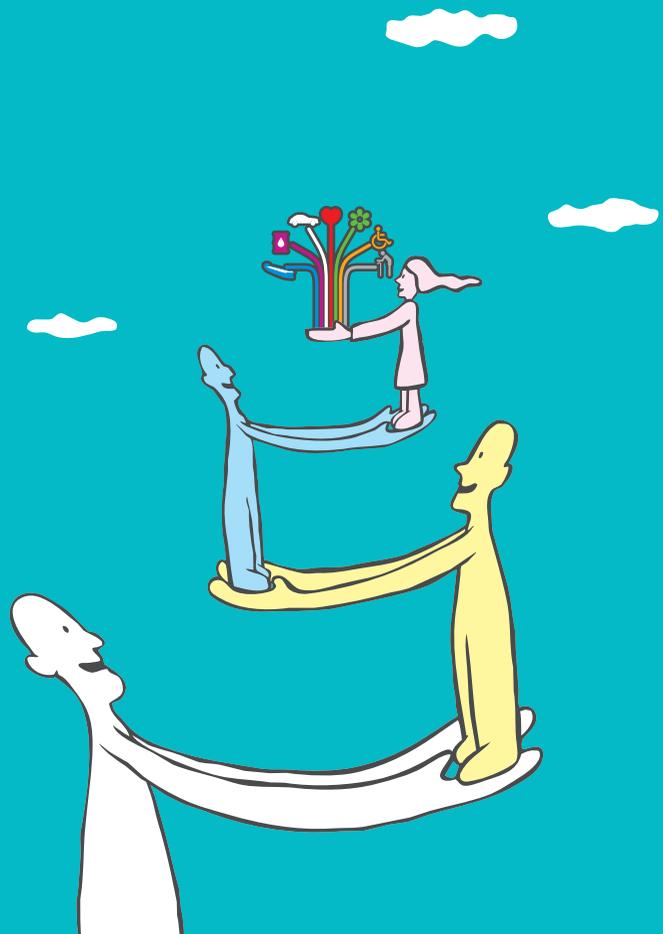
미래를 위한 결단의 정치 리더십



2005년에는 복지개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슈뢰더의 사민당과 메르켈의 기민당이 좌·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영논리에 머물지 않고 독일의 미래를 해 좌·우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5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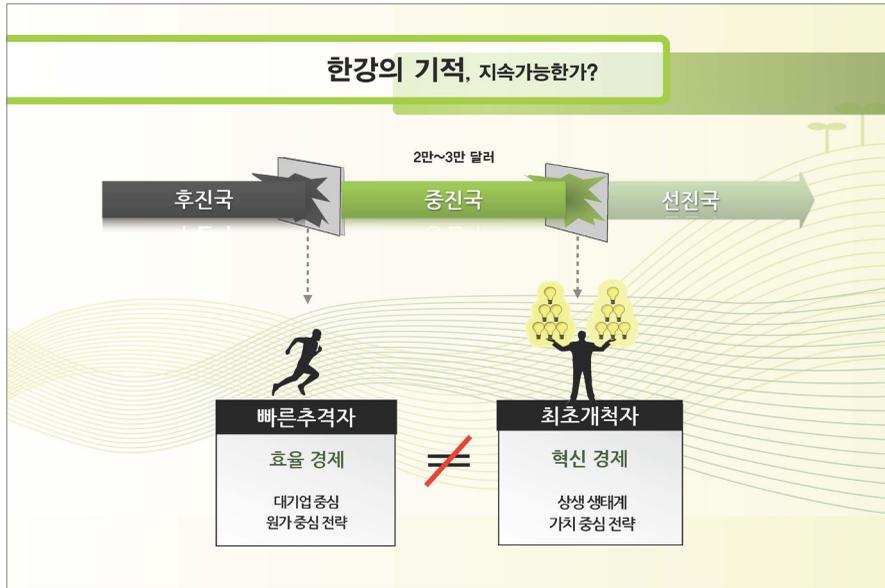
'혁신 국가로 가는 길' 이민화 KAIST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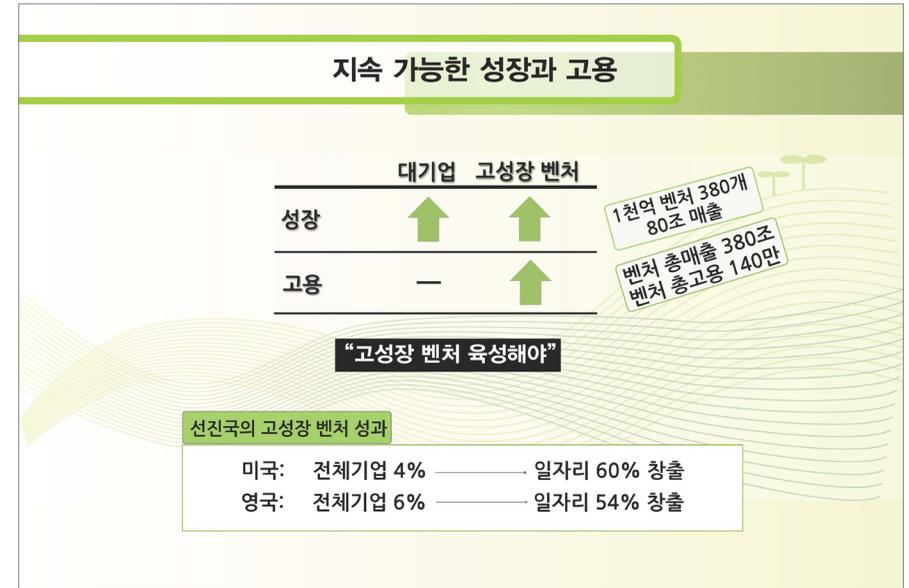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3. 혁신국가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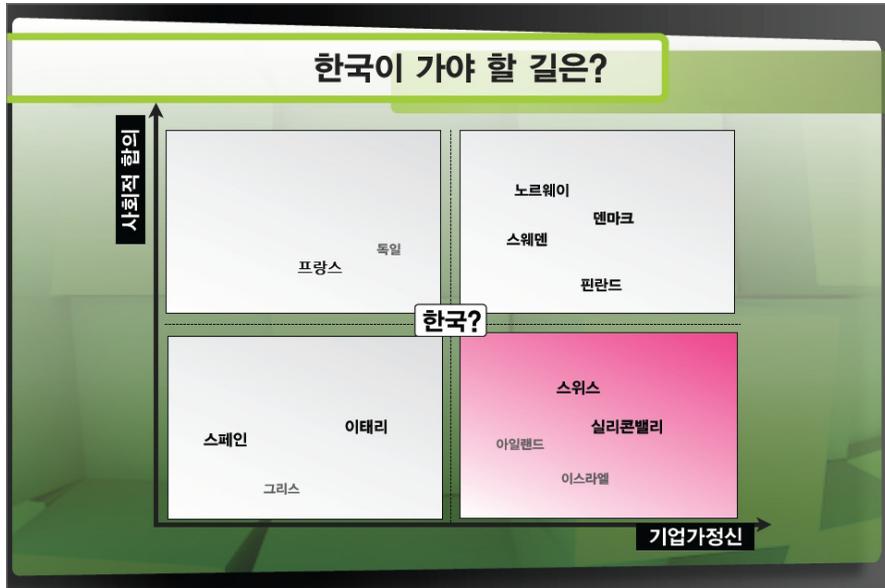
이민화
KAIST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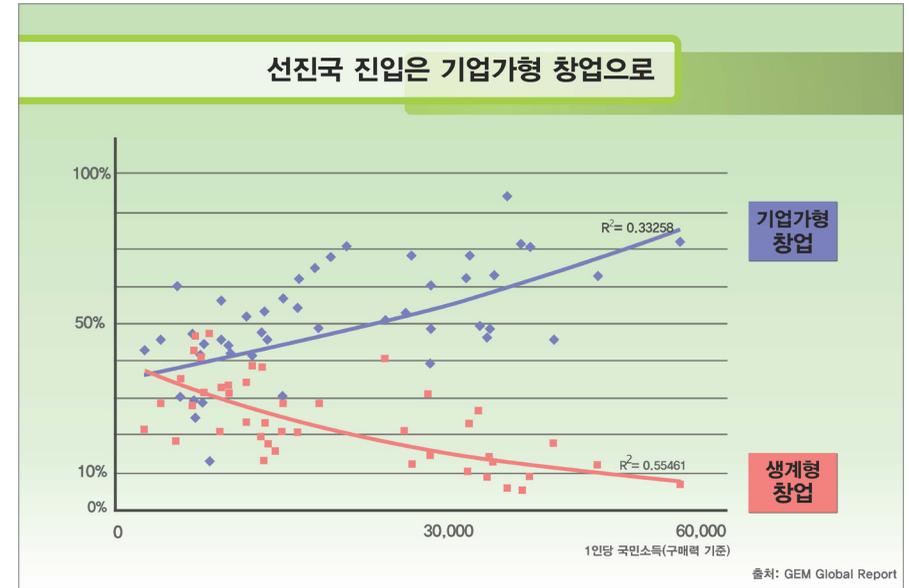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빠른 추격자 전략의 최우등생이나, 이 방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면, 이제는 창조적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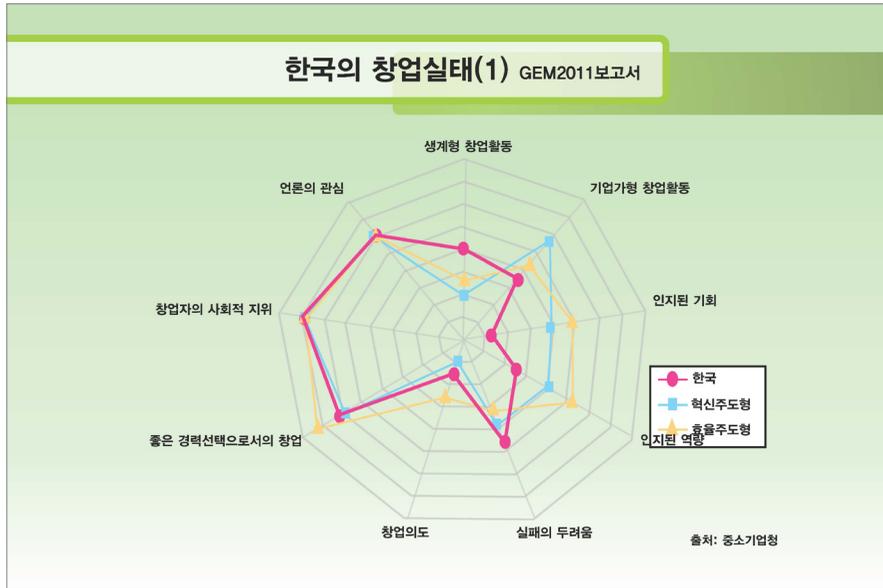
대기업은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반면, 고용에는 매우 미미한 기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전체기업의 4%의 고성장 벤처가 일자리의 60%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 1개에 불과하던 천억벤처가 작년 380개를 넘으면서 벤처 전체는 총 매출은 380조, 총 고용 140만을 불과 15년 만에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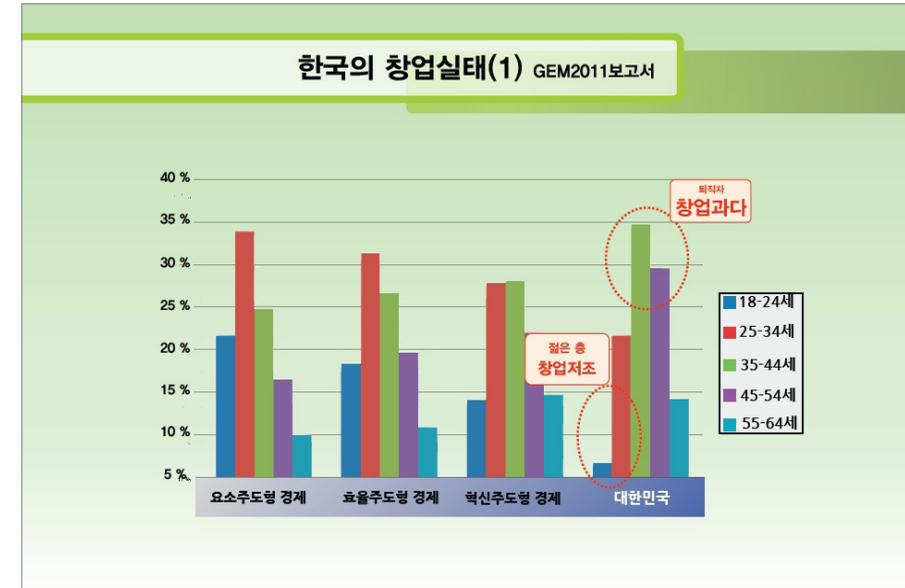
이제, 한국의 미래 모델을 생각해 보면, 북유럽형은 사회적 자본 축적이 복지 증가 속도에 못 미치면 남유럽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인의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스위스와 실리콘밸리 모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이라고 제언 드리는 이유입니다.



창업에 대한 GEM 보고서는 후진국은 생계형 창업이 선진국은 기업가적 창업이 주도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형 생계형 창업에서는 세계 최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선진국형 기업가적 창업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연령을 보면 청년 창업은 저조한 반면, 생계형 퇴직자 창업은 지나치게 과다합니다.



그런데, 기업가형 벤처보다 생계형 자영업이 사실 더 많이 망합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대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 때문에 생계형 창업에는 자금이 몰려드는 반면, 기업가형 창업 자금은 메말라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 자금의 홍수에서 기업가형 창업의 가뭄지역으로 자금공급의 물꼬를 트는 소액 엔젤투자인 클라우드 펀딩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제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 혁신 경제를 달성하는 길이 과연 어디 있는가? 바로 기업이 정신을 키우는 혁신국가로 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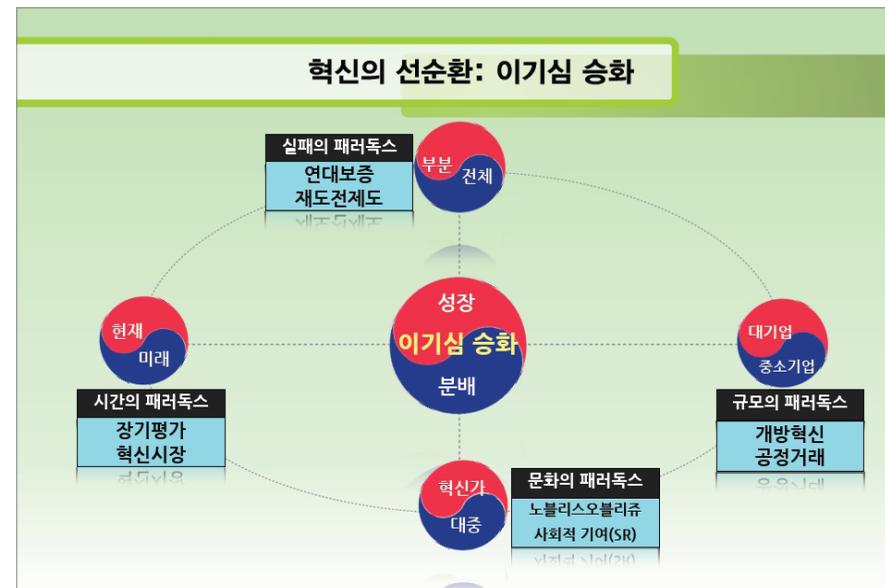
성장이 따르지 않는 제로섬 구조에서는 이기심의 추락으로 집단간 갈등이 증폭되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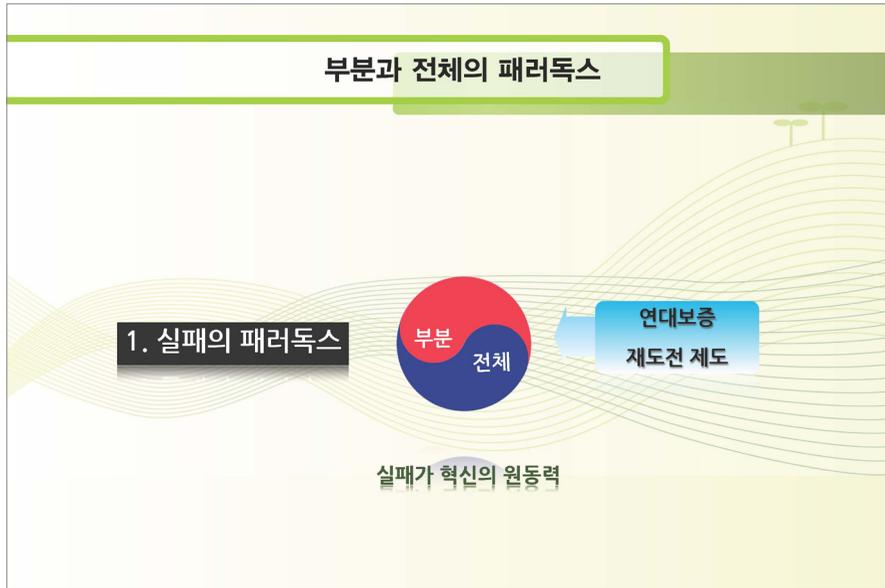
혁신적 가치가 창출되는 플러스(+)섬의 구조에서는 이기심이 승화하는 착한 성장이 되지요. 결국,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기업가적 혁신으로 가능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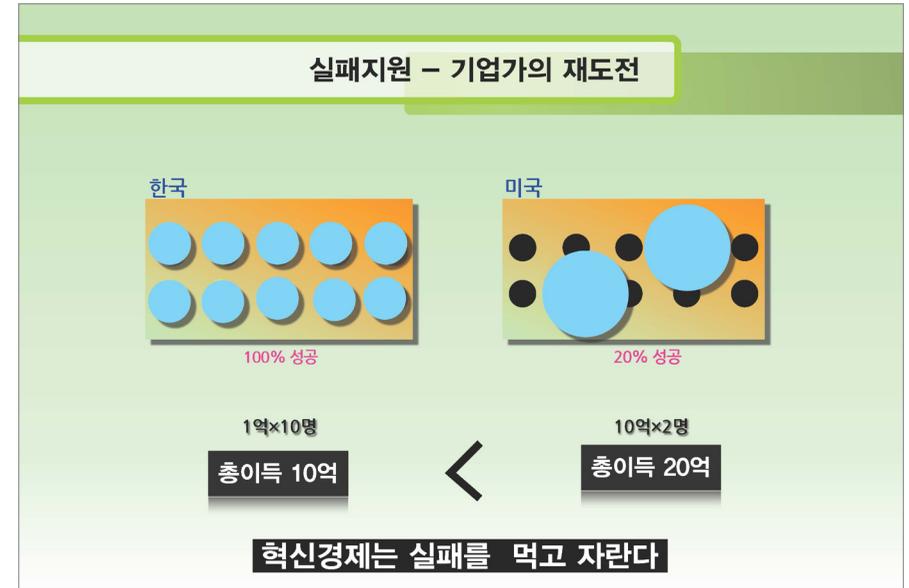
한국은 아직도 양극화에 의한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실패의 패러독스, 혁신을 평가하지 않는 시간의 패러독스, 대중소기업의 갈등인 규모의 패러독스, 혁신을 규제하는 문화의 패러독스가 착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요.



이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기심이 승화되는 착한 성장으로 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패의 패러독스는 연대보증과 제도전 제도로, 시간의 패러독스는 장기평가와 혁신시장으로, 규모의 패러독스는 개방혁신과 공정거래로, 문화의 패러독스는 노블리스 오블리류와 사회적 가치 선순환으로 극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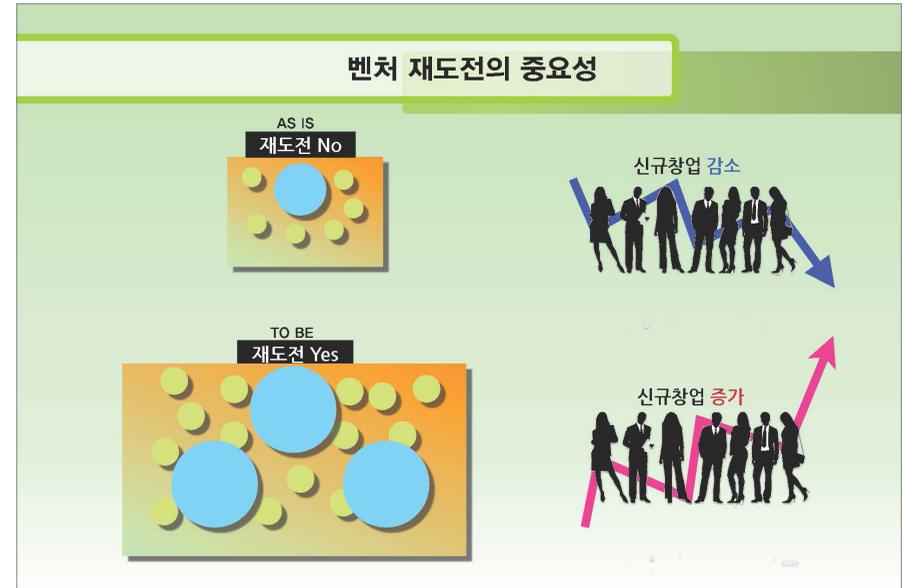
첫 번째 실패의 패러독스는 연대보증과 제도전의 제도가 극복 대안 중 일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버는 반면, 실리콘밸리의 경우 8명이 실패하고 두명이 성공하여 두 배인 20억을 벌고 있습니다. '혁신경제란 한마디로 실패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실패한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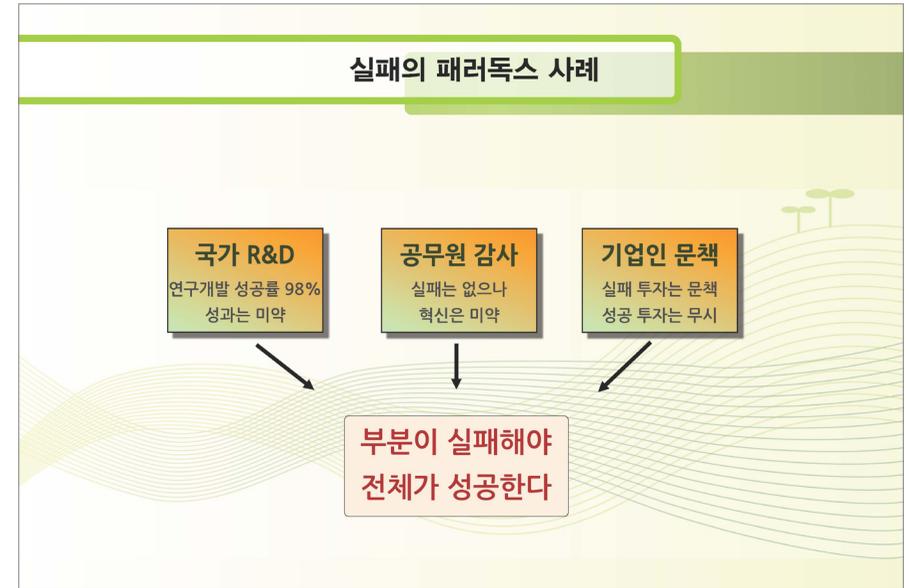


여기서 실패한 기업인을 신용불량자로 내몰면 신규 창업은 감소되고 이들의 재도전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창업이 증가하겠지요. 바로 한국과 실리콘 밸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현재의 제도로 10만 창업시 5년 후
50,000명의 신용불량자 발생

연대보증개선 엔젤회수시장

우리의 희망대로 10만이 창업이 성공하면, 5년뒤 5만의 신용불량자가 예상됩니다.
 국가적 비극이지요. 스마트 시대를 맞아 모처럼의 창업 붐을 뒷받침할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회수시장이 절실한 이유지요.



실패의 패러독스 사례들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국가R&D, 공무원 감사, 기업인 배임등 한이 없습니다.
 '부분이 실패해야 전체가 성공하는 실패의 패러독스가 선진국 진입의 비밀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갈등

2. 시간의 패러독스

장기평가
혁신시장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

두 번째 시간의 패러독스는 장기평가와 혁신시장으로 극복가능합니다.

단기 평가의 문제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
현직의 성과는 전직의 혁신
단기 평가는 혁신을 저해

임기의 문제
대통령 임기
장관의 임기
공무원 근속기간
대기업 임원 근속기간

혁신은 본질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갈등구조입니다.
 현직의 성과는 전직의 혁신 결과이기에 결국 단기평가는 혁신을 저해합니다.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의 짧은 근속기간이 전문성 결여로 혁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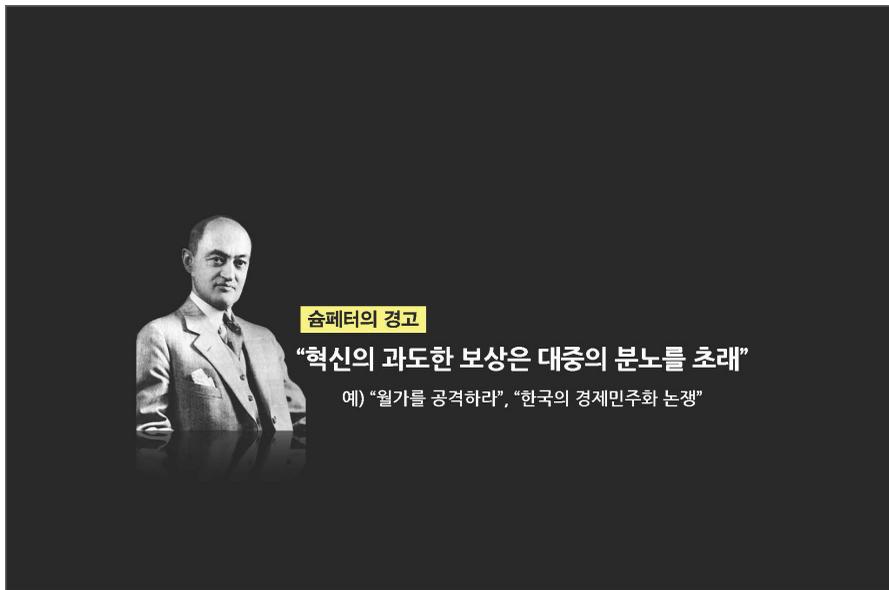
세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은 개방혁신과 공정거래로 극복됩니다.



창조경제에서는 R&D 투자를 판매수량으로 나눈 것이 경쟁력인데, 대기업은 분모인 글로벌 판매 역량에서, 중소기업은 분자인 R&D 혁신역량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규모의 패러독스이지요. 즉 혁신은 중소기업이, 시장은 대기업이 분담하여 개방 협력하는 것이 최적의 경쟁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공정한 시장 플랫폼 위에서 중소기업이 혁신의 꽃을 피우는 착한 성장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일 것입니다.



혁신의 마지막 패러독스는 혁신가와 대중의 갈등인데



슘페터가 경고했듯이 혁신의 과도한 보상은 월가를 공격하라는 대중의 분노를 야기하여 각종 규제를 초래하지요. 지금 한국의 경제 민주화 논쟁도 그 예 일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이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PRESENTATION 6
SBS 제언(提言)

신경렬 SBS 미래부장



신경렬
SBS 미래부장

SBS 미래부장 신경렬입니다.
지금까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복지
고용창출위한 사회 투자적 지출 확대
복지 행정 투명성·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성장
중소기업·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고용친화적 노사타협·정부지원

혁신성장
연대보증제 개선·재도전 기회 보장
글로벌 대기업·혁신 중소기업의 협력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 투자적 지출을 확대해야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설명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하고 고용 친화적인 노사간 타협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성장 방식에다 이민화 교수님은 기업이 정신을 통한 혁신적 성장론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창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후보에 묻는다

1. 고용보험 방치한 채 고용친화적 복지·성장 가능?

이런 해법을 바탕으로 참석하신 대통령 후보 3분께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등 천4 백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고용 친화적인 복지와 성장이 과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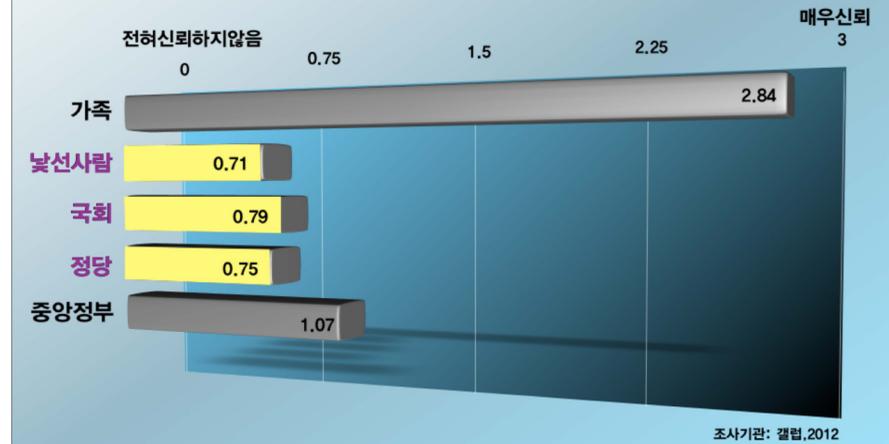
대선후보에 묻는다

2. 글로벌 대기업 · 혁신적 중소기업 상생전략은?

두 번째는 성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가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BS 국민의식 조사〉 당신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SBS의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국회와 정당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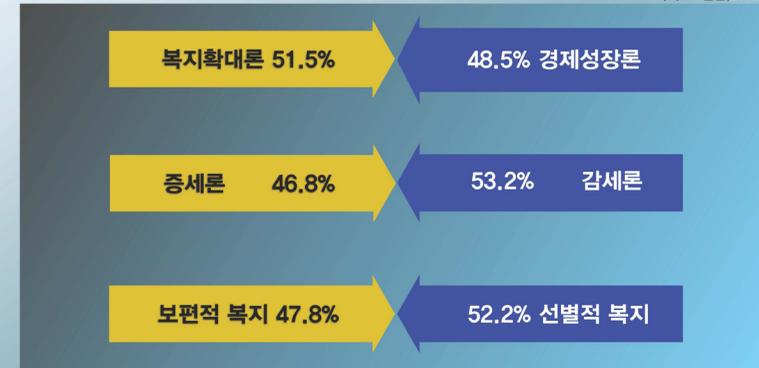
	유효투표 대비 득표율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
노태우	35.9%	32.9%
김영삼	41.4%	34.7%
김대중	39.6%	31.9%
노무현	48.7%	34.3%
이명박	48.2%	30.5%
평균	42.7%	32.9%

중앙선관위 자료

자료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자롭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유효표의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총 유권자 기준으로 따지면 30%대의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70%는 선출된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국민의식조사〉

조사기관: 갤럽,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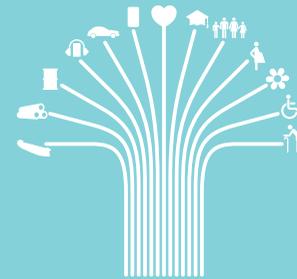


후보들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론 과 경제 성장론이,
 증세론 과 감세론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어느 정책하나 힘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대선후보에 묻는다

3. 국민신뢰·예측가능한 정책위한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

따라서 국민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예측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 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COMMENT

SBS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강평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1. 고용보험 방치한 채 고용친화적 복지 성장이 가능한가?
2.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 상생전략은?
3. 국민 신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겠는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먼저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비정규직 또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 1,400만 명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고용 친화적인 복지가 가능하겠나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 대해 답을 드리기 전에 저의 복지철학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의지가 있거나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이런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열심히 일하는데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놓이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의 60%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또 영세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 경우에 역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짤 때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단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50%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 쪽에서 노력 많이 했고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월 13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대해서 100% 지원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영세한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특수 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야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복지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지출 확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방향 잘 잡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큰일나겠다는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또 현장의 목소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보장, 즉 자꾸 돈을 나눠주는 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득보장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예컨대 직업훈련기회라든지 교육기회라든가 등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서 경제활동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쪽으로, 또 생애주기마다 빈곤층이 아니라도 어려움을 겪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 기본법 거의 뜯어 고치다시피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정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 정책 펴 나간다면 아주 건전하게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기업들도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성장정책 개념부터 먼저 확실히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충돌하는 게 아니고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이 선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경제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운용 시스템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 그것이 성장에 결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 돕는 거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두 트랙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뭐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고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지만, 제 생각에 대해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고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기술개발하면, 내가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신나게 열심히 일해서 경제가 다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고, 또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서, 경제 주체가 여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도 경제 주체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 거둘 수 있다는 희망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겠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성장잠재력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얼마 전 창조경제론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시대가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것이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해있고 IT, ICT 최강국,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IT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이 전 산업과 융합하고, 전 산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적용됨으로써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창조 창업업국가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갈 방향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문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과학기술, 문화 이런 것이 산업하고 융합됨으로써 혁신기업이나 창업을 많이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데 무서워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패자 부활할 수 있는,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또 성실하게 일하다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관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용기 있게 이런데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하려 합니다.

세번째로 어떻게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잘 이뤄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국민 사이,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천된다고 볼 때, 서로 믿고 신뢰하고 국민 마음이 하나로 돼야 하는 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도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 국민이 모두 하나 되는 기운을 조성하고 새 정부가 됐을 때 대통합정신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가 정부가 우선 투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물론 국가적으로 공개해서 안 될 것도 있겠죠. 그건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3.0 이라고 해서, 국민에 공개,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도 정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신뢰할 수 있고 정부도 책임있게 운용해야 될 것이고, 사실 정보 제일 많이 가진 곳이 정부입니다. 많은 정보 공개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에, 창업에 도움 줄 수 있다. 또 일을 추진할 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일에도 비정규직 쓰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부터,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려 하고, 이런 부문도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민간도 자연히 환경 속에서 같이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에 대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하는 정부를 저는 창조정부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확실히 내용 알고 신뢰하고 갈등을 없애면서, 국민도 또 자신의 의견 활발히 낼 수 있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패도 상당히 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정치쇄신 안에 어떻게 하면 부패를 제도적 근절하느냐 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쇄신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구축해서 부패도 척결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도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메모했습니다. 종이가 새까맣게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복지, 성장 그리고 정치개혁, 세 분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간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선진국은 2백년 걸려 완성한 결과를 5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난에 대해 열심히 산업화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다음에 자유에 대한 갈구를 민주화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격차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 격차, 빈부 격차, 세대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산업계 쪽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격차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다 좋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풀러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마치 외바퀴 자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 두 바퀴 경제입니다.

우선 경제민주화, 복지를 통해서 단순히 소비되고 사라지는 복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전에는 실패할까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그것이 아마도 창조적인 기반을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표현으로는 '착한 성장', 제가 썼던 표현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될 것입니다. 보통 포용적 성장, 혁신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등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0일간 여러 현장을 다니며 제가 느낀 것이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원 못골시장을 갔습니다. 다른 재래시장처럼주위 대형마트로 어려워졌습니다. 위기감에 이전에는 뽕뽕이 흩어졌던 상인들이 모여 서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 즐겁게 헤드리기 위해 가게들이 돌아가며 문을 닫고 악단을 만들고 라디오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너무나 친해졌습니다. 상인들 공동체가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들이 오는 손님들에게 전해져서 아주 즐거운 시장 장터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 엘리트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착한 성장도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이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도전함으로써 혁신 경제를 만들고 포용 성장, 착한 성장으로 이루어지면, 그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시 우리에게 복지,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반, 새로운 터전을 또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두 바퀴가 선순환된다면 자전거가 신나게 달리듯이 앞으로 앞으로 잘 전진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 같이, 여러 가지 고용에 관련된 보험 등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게 잘 구성되어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해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대기업이 잘 자리 잡으면 낙수효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환상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 몇 년 간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한편의 제대로 된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 산업이 잘 발전해야 우리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 즉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주식만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커서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낮추는 것처럼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튼튼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하고 있지만 이 한 축으로는 위험합니다. IMF 환란 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받쳐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 바로 그 옆에 제대로 된 튼튼한, 그만큼 튼튼한 중소기업, 벤처산업들을 발전시킨다면 그 두 축으로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산업, 내수산업이 받쳐 주고 또 만약 이 쪽이 어려워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받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축을 한시바빠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 창출 면에서도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 산업이 잘 성장한다면 질 좋은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단순히 잘 되니까 중소기업을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잘 커지면 대기업 자체에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그곳을 통해 대기업에 유입되고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으면 그곳에서 중산층이 복원됩니다. 그러면 그 중산층은 우리의 내수시장을 튼튼히 만들면서 대기업 물품을 구매해주는 건실한, 건강한 시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혜택은 대기업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잘 성장시킨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서의 역할,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끊임없이 대기업에 넘겨주는 역할, 그리고 또 중산층들이 제대로 성숙해서 대기업의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장덕진 교수님의 처음 강연이 인상 깊었습니다. 복지와 거버넌스 발전이 같이 가야 제대로 된, 안정된 국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두 바퀴 경제,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두 번째 부분이 거버넌스, 정치 혁신입니다.

최근에 정치혁신 부분에 대해 6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논

쟁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특권 내려놓고 정당 체제를 개혁하고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 사실은 왜 그런 제안을 지금 시점에서 했는가에 대한 공감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버넌스 문제, 정치 개혁에 대해 말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당면 과제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 풀기 힘듭니다. 내년에 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 신뢰를 우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행동을 통해 '이번에는 바뀌겠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권한을 더 가져야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권한을 더 달라고 주장할 시기가 아니고,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려놓으라고 사회 각계각층에 요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노동자들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은 양보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때가 올 것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 20~30대 학생들에게도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올리다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는 20~30대 젊은이들에게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려놓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 정치권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이 먼저 가진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사회 각계각층에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필요한 리더십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 두 번째는 융합적인 사고,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현장과 동떨어져서 일부 전문가들만 만나서 의논했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현장에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결방안까지 찾아내는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적극 차용하는 것이 현장 중심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융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단순히 한 전문가가, 또는 정부의 한 부

제10차미래한국
FUTURE KOREA REPORT 리포트

SBS 미래부

신경렬 부장
이창재 차장
고철종 차장
고희경 차장
조성원 차장
한주한 차장대우
김준용 PD
주민규 PD
문상훈 웹기획
소현재 인턴
서준석 인턴
윤가연 인턴

자문위원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공동기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지식파트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